

한국여성평화운동사 심포지움

“새롭게 읽는 한국여성평화운동, 흐름과 과제 ”



- 일시 : 2005년 12월 27일(화) 오후 3시~6시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교육관
- 주관 : 평화여성회 병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주최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후원 :  **한국여성재단**
KOREA FOUNDATION FOR WOMEN



한국여성평화운동사 심포지움

“새롭게 읽는 한국여성평화운동, 흐름과 과제 ”

한국여성평화운동사 심포지움

- 일시 : 2005년 12월 27일(화) 오후 3시~6시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교육관
- 주관 : 평화여성회 병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주최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후원 :  **한국여성재단**
KOREAN WOMEN'S FOUNDATION



진행

■ 사회 : 심영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및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1. 1부 : 통일, 군사, 여성인권 (오후 3시10분 ~ 오후 4시30분)

- 발표 (1) 여성통일운동사 /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2) 남북여성교류 / 김숙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3) 여성들이 하는 군축, 반전운동 / 김연리 (성균관대 여성학 강사)
 (4) 여성인권과 평화운동 / 최윤정 (포하나의문화 사무국장),
 조영주(한국여성연구원 연구원)

토론 (1), (2) : 윤정은 (여성주의저널 일다 기자)

토론 (3), (4) : 오김숙이 (전 여성태방연대,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2. 2부 : 경제, 교육, 국제연대 (오후 4시40분~오후 6시)

- 발표 (5) 법, 제도, 정책 개선을 위한 여성평화운동 /
 안정애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6) 여성평화교육과 평화문화운동 /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7) 국제연대활동 / 정경란(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고유경 (SAFE 코오디네이터)
 (8) 여성평화운동의 흐름과 전망 / 심영희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 (5), (6) : 차인순 (국회 입법 심의관)

토론 (7), (8) : 이대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성공회대 평화학 강사)

<1부 : 통일, 군사, 여성인권>

■ 발표문1 : “여성통일운동사” / 정현택(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4
■ 발표문2 : “남북여성교류” / 김숙임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13
■ 토론1 : “발표1과 발표2에 대한 논찬” / 윤정은 (여성주의재단 ‘일다’ 기자)	26
■ 발표문3 : “여성들이 하는 군축, 반전운동” / 김엘리 (성균관대 여성학 강사)	30
■ 발표문4 : “여성인권과 평화운동” / 최이윤경 (포하나의문화 사무국장), 조영주 (한국여성연구원 연구원)	40
■ 토론2 : “발표3과 발표4에 대한 논찬” / 오김숙이 (전 여성해방연대,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51

<2부 : 정책, 교육, 국제연대>

■ 발표문 5 :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여성평화운동” / 안김정애(국제관계학 강사)	55
■ 발표문 6 “여성평화교육과 평화문화운동” /김정수(평화여성회 공동대표)	62
■ 토론 3 : 발표5와 발표6에 대한 논찬 / 차인순(국회입법 심의관)	64
■ 발표문 7-1 : “한국여성평화운동과 국제연대” / 정경란 (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67
■ 발표문 7-2 :국제연대 활동 중 7. 군사주의와 여성인권 / 고유경 (SAFE 코디네이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75
■ 발표문 8 : “여성평화운동의 흐름과 쟁점” / 심영희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79
■ 토론 4 : “발표7과 발표8에 대한 논찬” 이대훈 (평화학 강사)	91

여성통일운동사

정 현 택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1. 여성통일운동의 형성과 발전

분단확정기에 해당하는 1945-1953년, 냉전기에 해당하는 1954-1987년의 시기는 반공주의 정치가 공고화되는 시기였고, 그래서 통일운동은 독재권력의 탄압 속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분단확정기의 통일운동은 주로 혁신정당과 제 사회단체에 의해 주도되었고, 냉전기에 와서도 민간에 의한 통일운동은 존립할 수 없었기에 함석헌, 장준하, 박형규, 문익환과 같은 몇몇 인사들에 의해서 통일론이 제기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한국현대사에서 주목할 만한 전환점으로 거론되는 6월 민주화투쟁과 6. 29 선언 이후 각계각층의 정치적 각성이 높아지고, 대중운동이 활성화되기에 이르렀다. 1987년을 전후하여 진보적 사회단체와 기독교단체가 중심이 되어 통일운동은 당국의 탄압 속에서도 서서히 불타오르기 시작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통일운동을 대중화하고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바로 이 시점에서 여성들도 통일운동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런 점에서 여성통일운동의 시작은 늦은 편이다.

여성들에 의한 통일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한 집단은 기독교 여성이다. 1980년 3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총회에서 '한국교회 통일선언'을 채택한 것에 영향을 받아 <한국YWCA연합회>(YWCA)가 먼저 통일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82년부터 이 단체는 주로 평화운동에 더 역점을 둔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1984년에 '통일을 위한 기독교여성들의 사명'을 토론하고, 1985년에는 통일을 위한 매일 '정오 기도회'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1986년에는 평화통일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YWCA는 1992년에 '평화·통일위원회'를 만들고,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통일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NCC여성위원회> 그리고 <한국여신학자협의회>(이하 여신협)도 통일운동에 대단히 적극적이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1987년 5월에 평화통일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여성적인 관점에서 통일논의를 시작하였다. 여성들은 “남성중심적이고 여성의 경험이 배제된 통일운동을 비판하고 오히려 여성민중이 고난을 딛고 해방되는 주체적 통일운동”에서 그 대안적 모습을 발견하였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88년 2월에 분단 50년째인 1995년을 회년으로 선포하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기독교선언’을 발표하였다. 구약 레위기 21, 25장과 이사야서 61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근거를 두고 있는 회년의 선포는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통일 후의 평화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좀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교계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 위외 세 여성단체는 평화통일 회년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이들은 평화통일회년을 위한 교회여성정책협의회, 통일회년마당, 교회여성회년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여성통일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민족민주전열 가까이 있는 여성단체를 총망라하여 결성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여성통일운동에도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였다. 1987년에 창립된 여성연합은 1989년 4월에 ‘반전반핵평화위원회’(1993년 통일평화위원회로 개칭) 남북여성교류, 통일 및 평화교육, 북한여성돕기운동, 평화문화캠페인, 반전운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성통일운동의 조직적 발전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여성운동 내에서도 통일 및 평화운동을 주된 과제로 삼는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결성되었다는 것이다. 1997년에 진보적인 여성운동 내에서 통일 평화운동을 전담할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이하 평화여성회)’가 결성되었고, 기존의 통일운동에서 분화한 반미여성회 등도 생겨났다. 또한 지역의 여성통일운동도 활발해져부산여성회, 울산여성회, 수원여성회 등이 적극적으로 여성통일한마당, 어린이 통일캠프, 통일강연회, 통일기행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특기할 만한 점은 남북교류가 확산되면서, 남북 간의 공동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협의체 형태의 조직이 구성된 것인데, 여기에서 여성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미 1998년에 남북교류와 남한 사회 내에서 이념의 차이를 넘어서 남·/남대화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목적 아래 <민족화해번국

면협의회>가 결성되었고 그 안에 '여성위원회'를 결성하고, 여성 내부에 존재하는 이념의 차이를 넘어서 서로 간에 대화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통일운동의 새로운 고양기를 맞이하면서, 변화된 정세 속에서 '진보적 통일운동단체'들이 공동행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1년 3월 광범한 연대틀로서 '6. 15 남북공동행동선언 실현화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이하 통일연대라 칭함)'을 결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양대 노총, 전농, 범민련 남측본부 등 48개의 사회단체가 참여하였다. 여성들도 통일연대의 틀 내에서, 여성위원회를 조직하고, 여성들만의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협의체 단체와 종단이 2000년부터 새해맞이, 6. 15 및 8. 15 민족공동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이런 3자 연대의 틀을 통해서, 여성들 역시도 북의 여성들과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3월에 와서는 그간의 3자 연대를 해소하고, 남과 북 그리고 해외 여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6. 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립하였고, 이를 통해서 남과 북 그리고 해외를 망라하는 통일운동의 대표적 조직체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준비위원회 산하에 노동, 농민, 여성, 청년학생, 교육, 학술본부 등이 구성되었고, 여성도 여성본부의 활동을 통해서 북의 여명과 지속적인 접촉과 교류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협의체 조직이 지나는 장점은 우선 그간 남북 간의 '차이'에 못지 않게, 남측 내부의 '차이'가 문제시되었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남남대화의 길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북과의 교류에서 다양한 단체들이 파상적으로 시도하던 남북교류를 통합해주고, 이를 통해서 교류의 대표성을 높일 뿐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다.

II. 통일운동과 통일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여성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들은 남북 간의 평화공존이 여성의 삶 전체와 얼마나 깊이 연계되어 있는가를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이산가족의 고통, 군사주의 문화와 더불어 도처에 팽배한 군사주의 문화, 과도한 군사비를 극복하는 것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한국 여성들은 1990년 이후의 독일 통일과정을 통해서 여성의 주체적인 참여와 사회 제 구성원의 민주적인 참여가 결여된 협상과정이 이후에 여성의 삶을 얼마나 열악하게 만드는가를 체험할 수 있었다. 이에 여성

들은 그간 진행되어온 통일정책과 통일운동을 여성주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 대표성이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여러 자문기구에
는 여성 민간전문가가 거의 30% 이상 참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논의에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의구조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행정 기구
내에 여성의제를 전담할 만한 부서도 생겨나고 있지 않다. 통일부 내에는 아직 여성
정책담당관제가 신설되지 않았고, 여성공무원은 여전히 그 비율이 낮다. 그리고 평화
적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문별 부속합의서 이행 및 정부당국간
교류를 위한 공식기구인 분야별 공동위원회 중 사회문화공동위원회에도 1998년부터
여성특별위원회회의의 국장급 여성공무원한 명이 겨우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여성연합>과 <평화 여성회>는 2000년 5월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정
상과 국민들에게 드리는 여성들의 건의문’을 작성하여 34개 단체와 여성제인사 25명의
연명으로 제출하였다. 이 건의문에서 여성들은 향후 남북공동협력사업이 평화주의적,
환경친화적,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실행되기를 촉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여성들
은 첫째로, 남북정상회담과 그 후속과정에서 민간단체의 민주적인 참여와 여성의 참여
를 확대하고, 둘째로는 여성관련 의제를 반드시 포함하여 향후의 남북교류와 경제협력
과정에 여성의 역할을 높이고, 셋째로 북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아로 인한 모성과괴와
어린이 질병에 대응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넷째로는 남북한 모두가 새로운 형태의 평화교육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서 다음을
포용하는 평화공존의 지혜를 쌓을 기반 마련을 요구하였다. (여성연합정기총회보고서,
2001, 107 & 272-4)

또한 2004년 8월에 다시 <여성연합>과 <평화 여성회>는 여러 단계의 논의를 거쳐
통일부와 여성부에 구체적인 여성의제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여성들은 1) 사회문

1) 이렇게 여성의 주도적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첫째로 통일문제의 중요성과 여성의 능동적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성들에게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유교적 전통과
분단현실에 의해 강화된 가부장적 사회분위기는 통일정책 분야를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여
성참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셋째로, 정부 차원에서의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여성
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시키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미진하였다.⁸⁾ 사실 통일문제 관련분야에 여
성 전문인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갖추어진 여성인력도 단일종성적 구조 속에
서 제대로 묶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정부 차원의 여성주대조치를 통해서 그리고 여성운동의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서 통일정책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증대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병행하여
여성 전문인력을 발굴하려는 노력 또한 정부나 민간단체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노력과 관련하여 통일부에서는 미약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화협력분과회의의 구성 시에 일정한 비율의 여성 참여를 보장할 뿐 아니라 여성분과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2)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기금확충을 요구하고, 3) 북의 여성관련 시설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한 남북여성회의의 개최를 지원하고, 3) 남북여성의 생활작업반 운영과 IT교육 교류를 계획하거나 지원하고, 4) 개성공단의 활발한 가동 시에 발생할 여성문제에 대한 사전 연구 및 공동조사를 가능케할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이런 제안에 대해 통일부나 여성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기획하거나 실행한 바는 없지만, 이러한 여성의제 제안은 남북협력관계가 더 진전되고,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가 가동될 경우에 중요한 쟁거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 여성들은 앞에서 제시한 여성의제를 실행하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야할 것이다.

통일운동 내에서도 여성들은 여성주의 관점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90년대 초, 여성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성차별의 상당 부분은 분단이 초래한 군사주의와 연루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왕의 통일운동이 자동적으로 군사주의를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기에 여성들은 따로 평화운동을 통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고,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을 결합하고자 하였다. 우리 통일운동은 민족주의 담론이 여전히 중요한 동력이며, 국제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운동의 새로운 문제의식과 공유하는 바가 많지 않다. 다시 말해 그간의 통일운동이 민족중조나 민족적 동질성에 토대를 둔 통일국가외 이상을 넘어서는 어떤 전망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여성들은 통일운동을 포괄하는 좀더 확장된 범주로서 평화운동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더불어 여성운동은 '통일을 통한 평화로'에서 '평화를 통한 통일로' 운동 슬로건을 바꾸어가고 있다.

III. 활동

여성통일운동의 가장 큰 활동으로는 1997년부터 활발해진 북한여성돕기운동을 들 수 있다. <여성연합>, <평화여성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원불교여성회>, YWCA 등이 보금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주로 분유나 내복, 갑갑 등이 전달되었다. <통일연대 여성위원회>나 <교회여성평화연대>도 독자적으로 지원운동을 전개하였다. 최근에 특가한 만한 일은 2005년 8월에 <6. 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여성본부가 모금과 협찬,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등을 통해서 북의 민주여성동맹(이하 여맹이라 칭함)에 버스 2대와 엠프시실(약 1억 2천 만원 상당)을 지원한 것이다. 이는 남측의 여성들은 북의 여성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북의 여성조직활동을 독려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런 북한동포돕기운동은 여성에게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게 하고, 이를 통해 여성통일운동을 대중화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여성이 보낼 수 있는 지원규모는 제한적이어서, 이것의 사실상 여성통일운동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더라도 이는 운동의 대중화 확산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여성이 북한여성의 굶주림에 공감하고 이를 도우려한다는 소박한 의미에서도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

통일운동에서 통일교육은 그 주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 밖에 없다. 해방 후 60년 동안 한국사회에서는 반공주의가 공공 담론의 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여성의 정치에의 접근이 제한 당원였던 지난 반 세기의 역사를 감안하자면, 여성은 이런 반공주의 교육이나 담론을 간접적으로 전달받을 수 밖에 없었다. 최근에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통일방안이 모색되면서부터 여성이 통일운동의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관계나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여성대중을 향한 통일교육이 불가피하다.

대다수 여성단체들의 통일교육은 8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되었는데, 1984년 YWCA를 필두로 여협과 여연 등이 통일교육 교재를 만들고, 다양한 형식으로 통일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런 활동에서 주축을 이루는 것은 장연희였고, 그 외에도 심포지엄이나 토론회, 혹은 평화통일포럼 등이 개최되었다. 특히 2000년에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북한바로알기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여성들도 북한바로알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외에도 특기할 만한 사안은 YWCA가 2001년부터 6·7세 미취학 어린이를 평화통일교육을 과제로 삼고, 유아용 평화통일교육 교재를 연구, 개발하였고, 평화여성회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인형극을 전국적으로 상연한 것이다. 이는 통일교육의 한 단계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높이 살 만하다. 또한 여성단체들은 지역단체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일교육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통일부의 지원이다. 민간단체에 의해 구성된 <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에서 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통일교육을 전달하는 만큼 통일교육을 가장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여성통일지도의 형성과 통일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을 목표로 하는 이 단체는 2004년에는 여성통일학교를 개설하는 것 외에도 통일교육영상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정기자료집, 2005: 20)

지난 몇 년 사이에 여성운동도 이러한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여협이나 여연, YMCA,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세계평화여성연합 등의 각기 정치적 색깔이 다른 여성단체들이 함께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민화협이라 칭함)에 참여하게 되었고, 백령도 기행,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한 여성의 요구와 관련한 통일정책 간담회, '한반도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여성단체간부반 통일교육, '화해와 민족을 위한 여성들의 대화' 워크숍 등의 활동을 통해서 남남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일부 여성단체들이 여성 간에도 남·남갈등을 해소할 필요성이 인식되었지만, 개별 단체들에 의해서 남·남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화모임이 준비된 경우는 별로 없다. 이는 우선 여성 간에는 통일문제를 둘러싼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개별 여성단체들이 아직은 자체 내의 통일교육에 집중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6. 15남북공동선언 이후 민화협, 통일연대, 그리고 7개 종단이 공동으로 새해맞이, 6. 15 및 8. 15 남북공동행사를 북한 및 해외동포와 함께 개최하면서, 여성들도 이에 동참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들은 서로의 다름을 넘어서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북측 여성과의 부문상봉을 함께 준비할 기회를 가졌다. 2005년 3월에 '6. 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상설적인 기구로 꾸려지고 그 산하에 55개 여성단체가 참여하여 여성본부가 결성하였고, 이는 남측 여성들 간에 서로간의 차이를 좁히면서 연대활동을 강화시켰다.

북한이탈 여성주민을 위한 활동은 활발히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실직과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사회·문화적인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²⁾ 많은

2) 1998년 9월까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 여성의 숫자는 115명이고, 그중 96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북한이탈 여성주민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생활은 매우 열악하다. 이들 중 82.4%의 여성이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해 실제 취업하고 있는 여성은 29.4%에 불과하며, 가구당 월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79.4%에 이르렀다. 그리고 무무로 이루어진 가정을 가진 여성은 5.9%, 무무/지녀로 이루어진 가정은 50%, 연모가정도 20.6%에 이르렀다.¹⁾

단체나 교회가 지원을 하였지만, 그 대부분은 일회적인 행사였다. 이에 평회여성회가 '진달래와 무궁화모임'을 통해서 대화와 생활 경험 나누기 운동을 하였지만, 3년 만에 해소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이 모임에 참석하는 양측 사이에 남북관계를 둘러싸고 정치적 입장차가 상당히 컸고, 남북교류를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는 여성단체에게는 북한이탈 여성주민에 대한 지원은 교류사업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비한다면 YWCA는 북한이탈 여성주민과 관련된 상담·직업훈련·직업알선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비교적 꾸준히 해오고 있고, 탈북자 가족과의 만남 프로그램도 시도하였다. 또한 YWCA 서부지역위원회는 2001년부터 연길에서 버려진 북한이탈어린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구체적으로 북한 이탈어린이를 위한 탁아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YWCA80년사, 2005: 244-5, 357)

IV. 여성통일운동의 과제

성폭력, 성희롱, 동일노동 동일임금, 고용상의 불평등 제거 등의 이슈는 대다수 여성들에게 친숙하지만, 여성통일운동은 여전히 우리에게 낯설다. 이 낯선 주제를 어떻게 여성대중에게 친숙한 그 무엇으로 다가가도록 하고, 통일운동이 왜 여성의 삶과 지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를 이해시키는 것이 여성통일운동의 과제이다.

그러나 여전히 광범한 여성대중의 남북문제에 대한 정보획득은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먼저 여성들에게 '북한 바로 알기'와 '북녘동포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여성들이 통일운동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어떤 편견이나 특정한 이념적 편견에 덜 사로잡혀 있을 긍정적인 면을 동시에 내포한다. 이런 이점을 적극 활용하면서, 여성운동은 광범한 여성통일교육을 추진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대중화를 모색해야 한다. 물론 '북한 바로 알기' 사업은 북한 문제에 대한 지식의 확대 이상이어야 한다. 즉 이것은 북한동포돕기운동, 금강산관광, 남남대회의 모색, 일상적 폭력에 저항하는 평화캠페인 등과 같은 일상적인 실천과정과 결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성이 여성만의 통일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기존의 남성 중심의 통일운동에 일정 세력을 가세해 주거나 혹은 남성에 적대해서 통일운동을 통해 '여성의 세 분리'를 시도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여성통일운동은 여성적 관점에서 통

일운동을 재창조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여성통일운동은 그간의 정치
 일변도의 통일운동에 평화주의적 시각을 첨가하고, 전쟁을 정당화하는 이론(just-war
 theory)에 맞서서 '돌봄'과 '배려'의 시각에서 그간의 남북관계를 돌아보고, 대안적인
 화해·협력 체제의 모색을 제안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성통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간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지낸 편견, 즉 통일운동은 민족주의와 연결되고 동시에 이는 가부장제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통일운동을 백안시하는 태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에게도
 민족문제는 현실이고, 한국여성들은 한반도 분단의 공동운명체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통일·평화 운동을 기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운명의 개혁을 스스로 거부하는 꼴이 된
 다. 지금도 진행 중인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 여성은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여기에
 여성적 관점을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여성교류

김 숙 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1. 들어가는 말

한국의 여성평화운동사에서 남북여성교류는 여성평화운동과 여성통일운동이라는 두 맥락에서 주요한 위상과 의미를 갖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과 주요 분쟁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반도에서 여성이 통일과정에서 평화의 촉진자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남북여성교류의 역사를 총괄적으로 서술하는데 있고, 지면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깊은 분석은 다음 연구자에게 맡긴다.

2. 남북여성교류의 흐름

분단 이후 재개된 남북여성교류의 짧은 역사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서 그 흐름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시기인 1988년 7.7선언 이후에서 6.15선언 이전은 남북교류 및 여성교류를 실험하고 도전하는 시기였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남북교류사업의 추진을 허락하였으나 정례적으로 전개되지 못하였고 간헐적으로 다양한 주제를 시도하였으나 몇 개의 한정된 주제에 의해 교류가 이루어졌고 일정한 틀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 시기인 2000년 6.15선언 이후부터 2005년 여성본부결성이전에는 남북여성교류가 남북간 민족공동행사 차원의 민간 통일운동과 협력적 제휴를 하는 시기로서 전체 남북민간교류와 공동사업 틀 안에서 집기, 실행하였다. 세 번째 시기인 2005년 6.15여성본부 결성 이후는 여성교류의 독자적 틀을 확보한 시기이다. 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이기는 하나 독자성에 있어 일정한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1) 1988년에서 6.15선언 이전

남북여성교류는 남북관계의 진전 및 남북간의 사회문화교류 전반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남북간의 사회문화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는 1988년의 노태우 정부의 “모든 부문에서 남북교류를 추진한다”는 ‘7.7.특별선언’과 1990년 8월에 조성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일련의 법적조치였다. 1991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의 제도화의 기본틀을 더한층 마련하였다. 1988년 이후 각계 각층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양한 제의가 나타나고 여성단체들도 여성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의를 하게 된다. 그러나 1990년 말까지 남북여성교류는 많은 제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성사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 기간 중 남한 여성들이 통일원에 북한주민집속신청을 낸 건수는 총 47건이다. 이 중에서 남북여성교류가 성사된 것은 15건에 불과하다. 남북여성교류의 첫 시도는 1988년 11월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지원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협의를 위해 스위스 글리온에서 열렸던 ‘남북기독인’모임에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북측의 조선기독교도연맹에게 남북교회여성교류를 제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측의 무응답으로 성사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여성계의 다양한 교류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많은 부분이 성사되지 않았다.

성사된 남북여성교류의 사례에서 특징을 보면 남북의 여성들이 공동의 관심이 모아진 주제가 ‘일본군위안부문제’, ‘평화와 여성의 역할’로 나타나는데, 이 주제들은 북일국교정상화문제, 국제사회의 북에 대한 핵사찰요구 등, 그 당시 남북당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과 필요성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북지원관련 여성교류도 경제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남한여성과 북한여성, 일본 여성들은 1991년-1993년까지 동경, 서울, 평양, 동경에서 4차례 걸쳐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하여 남북여성교류의 첫 밑거름을 알렸다. 회의를 성사된 배경은 1990년8월15일 동경에서 열린 ‘평화회의(원자탄수소탄금지회의)’에 참석한 이우정(당시 교회여성연합회)대표가 아시아의 평

화에 대한 위협은 남북분단이며 남북화해를 위해 남북여성교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부인회 시미즈스미코 회장이 일본을 방문한 북한대표에게 남북여성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대화상대를 리연구로 지정하여 동경회의의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다.(평화여성회, 1999: 131)

제1차토론회는 1991년 5월31일 동경에서 일본여성단체가 실행위원회로서 주체가 되어 남북여성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일본여성들의 의식화를 위한 심포지움이었지만 분단이후 남북의 지도급 여성 대표들 간의 최초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모임이었다. 이 회의에서 정신대문제가 국제적 여성운동과 인권운동의 중심과제로 남북여성의 공동참여와 대응의 주제로 부각되었다. 제2차 토론회는 1991년11월25일-30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의 주제는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통일과 여성', '평화와 여성'이었다. 제3차 토론회는 1992년9월16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주제는 '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후 책임', '평화창조와 여성의 역할'이었다. 3차 토론회에서는 향후 토론회를 제제화하기 위하여 각 국에 실행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하였다.

제4차 토론회는 1993년4월 24-29일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일본실행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일본과 남북조선, 진정한 화해를 구하며'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다. 제5차 토론회(1993.11월22-27일 서울 예정, '민족의 화해와 여성'주제)를 앞두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토론회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의 성과로서 이 토론회를 주도했던 남측의 여성들은 남측 실행위원회를 재편, 발전시켜 1997년3월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하 <평화여성회>)를 창립하여 본격적인 평화통일운동에 나서게 되었고, 북측도 이 토론회를 주도해온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아시아여성과 연대하는 조선녀성협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토론회의 의의를 깊어본다면 첫째 남북관계가 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제3국을 이용하고 판문점을 왕래하는 등 정부 일색이던 대북창구를 민간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처음으로 열었다는 것이고, 둘째 남북의 여성들이 여성과 관련된 주제를 함께 다루었으며, 셋째 남과 북의 여성이 얼마나 다른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동시에 한반도 평화건설을 위해 동등한 동반자로서 또 적극적인 참여자로 나서게 되었다는 점이다 (김운옥, 2000: 24). 넷째, 이 토론회를 통하여 남북여성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와 종군위안부문제

에 대한 남북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후 “중군위안부아시아연대회의”모임을 남북 여성들이 공동대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2) 일본군위안부대책활동:

‘아시아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가 중단된 기간에도 1993년 10월 동경에서 제 2차 ‘중군위안부문제아시아연대회의’에서 남북 대표가 만났고, 1993년 11월 평양에서 열린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관한 평양여성토론회’, 1995년 7월 일본에서 열린 중군위안부 관련 국제세미나에 남북이 함께 참석, 1998년 10월 북경에서 ‘중군위안부문제와 여성의 존엄을 주제로 열린 남북일 3자 회합 등을 비롯하여 이후 남북 여성들 사이에 중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활동이 지속되었다.

(3) 대북지원 여성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여성협력

1995년 이후 발생한 북측의 지속된 자연재해로 식량위기가 초래되어 인도적 지원활동이 남북여성교류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북한 여성과 어린이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1997년 이후 의류, 분유, 옥수수, 미역 등 생필품을 북한 여성단체인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여성협회> 등에 전달하였다.

2)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부터 2005년 여성본부 결성이전

(1) 2001년-2004년 민족공동행사 시 여성상봉모임

남북공동행사의 출범은 여성교류의 물꼬를 다시 뜨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2001년부터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내에 여성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남북여성교류를 추진하게 되었다. 남북민족공동행사에 참가한 여성대표들은 부문별 상봉시간에 남북여성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여성들은 주어지는 2-3시간을 적극적으로 기획하여 여성의 상황과 필요성 즉 당시 남북여성의 공동의 조건과 현실적 요구에 따라 주제를 정하고 논의 및 토론 등을 전개하였다.

6.15선언 이후 남북의 각계각층 여성간의 첫 만남이었던 2001년 6월 14-16일 금강산에서 있었던 ‘6.15 1돌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시 여성상봉모임에서 ‘향후 남북여성교류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남북여성대표 20여명이 논의하였

다. 남측의 너무나 다양한 제안 즉 평화정착을 위한 교류, 농민 등 제층별 여성모임, 지역차원의 교류 등에 북측은 <조선민주여성동맹>과 <조선여성협회>는 단일하지만, 남측은 상당히 다른 단체, 지역이라서 남과 북의 현실이 차이가 많다고 혼란스러워하면서 단일한 창구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2001년 평양에서 열린 8.15민족통일대축전 행사의 부분별 상봉모임시간에 22명의 남측여성 포함 남, 북, 해외동포 여성대표 100여명이 모여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여성의 역할'이란 주제로 '2001남북여성통일토론회'를 가졌다. 2003년 평양 능라도에서 열린 '8.15민족공동행사 여성상봉모임'에서는 북핵문제와 미국의 선제공격가능성에 의한 한반도전쟁 위기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과 북의 각 여성단체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상호 입장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2) 2002남북여성통일대회

남북여성들은 1년여에 걸친 험상 끝에 2002년 10월16-17일 북측의 금강산에서 '남북여성통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여성들이 독자적으로 대규모로 개최한 여성행사이다. 남북여성 700여명이 참가하여 6.15공동선언의 이행과 평화를 결의하였다. 노동계, 학계, 예술계, 종교계, 정치계 등 남북 사회의 각 분야 여성대표들이 망라된 행사로서 그 내용은 개막행사, 6.15공동선언관철과 평화를 위한 여성토론회, 남북 수예 및 미술전시회, 유희 및 오락경기, 남북공동연회, 관심분야별 소모임형식으로 진행된 부분별 상봉모임, 합동예술공연, 참가자 전원 춤추기, 폐막식 및 결의문 채택, 공동산행, 전송행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행사내용은 양측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행사에 따른 준비물은 북측이 준비하여 평양에서 운반해왔다. 깃발은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기를 사용하였다.

'2002남북여성통일대회'의 성과로 첫째, 분단이후 최초로 여성독자적인 행사로 대규모로 대회를 열었다는 점이고 둘째, 분단의 피해자였던 여성들이 통일의 길을 내는데 주도적으로 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발발하지 않게 평화노력을 함께 기울일 것을 천명함으로써 남북간 반목과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3) 2003, 2004 남북여성통일행사추진

'2002남북여성통일대회' 성사에 이어 2003년 남북여성실무협상을 통해 '2003남북

여성평화행진'행사를 합의하였으나 북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후 수차례 실무접촉으로 '2004남북여성통일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또 다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행사가 실현되지 못하였다.

비록 행사는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행사를 위한 잦은 남북여성간의 실무회담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급한 정세에 대한 남북간의 입장과 그 입장의 차이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기도 하고 설득과 논쟁을 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일조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여성교류협력의 시스템을 연구하고 여성통일운동의 전망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의제를 제시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사례로 여성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법령의 재정비 활동, 남북장관급회담 재개시 사회문화분야 당국간 채널로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 시를 대비한 여성의제 제시 등을 들 수 있다.

(4) 통천동기여성행동 및 지원활동

2002년4월, <북한어린이들기 교회여성평화연대>는 '북녘어린이들기 이유식보내기'운동을 전개하여 <조선여성협회>로 전달하였고,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평화를 만드는여성회>는 겨울내복을 보내는 일을 하였다.

2004년 4월22일 북의 통천역 대형폭발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생기자 남북여성교류를 추진하던 여성단체들은 통천동기여성행동을 조직하여 "북녘 통천에 새 희망을"이라는 주제를 걸고 범국민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캠페인은 '희생자추모'와 '긴급지원'의 내용으로 모금활동을 하였다. 모금한 돈은 남측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조직한 <통천소학교북구건립위원회>를 통하여 북한 통천 소학교에 학교기자재를 지원하였다.

(5) 일본군위안부대책활동

2000년12월 동경에서 '국제전범여성법정'이 성공적으로 열렸고, 2002년5월 평양에서 종군위안부문제를 주제로 남북일 토론회가 열렸다.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회의'를 조직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3년은 제1차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회의'는 중국 상해에서, 제2차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회의'는 2004년5월 서울에서 열렸다. 2005년10월 평양에서 남과 북, 일본,

필리핀, 중국 등에서 대표들이 모여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를 개최하여 공동대응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6) 학술활동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은 2000년12월 중국연변대학 여성연구중심과 공동으로 '남북,중국의 청소년 교육과 양성에 관한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2002년12월 중국 연지에서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주최로 '현대 사회경제발전과 여성'이란 주제로 남북한, 중국 3개국 여성학 학술회의가 개최되어 남북의 여성학자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2001년 9월23-29일 토론토에서 캐나다교회여성들의 모임인 <한반도여성과의 파트너십위원회>가 주관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연대하는 여성회의'가 남측 7명과 북측 4명의 여성대표를 초청한 국제회의에서 남측의 교회여성대표단은 북측 여성대표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남북여성교류와 협력과제를 토의하였다.

3) 2005년 6.15여성본부 결성 이후

(1) 6.15 여성본부 결성 과정

2005년 '6.15공동위원회(약칭 '남측위원회'내에 여성본부를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상설여성조직으로 발족하게 된 것은 여성통일운동사에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다. 남측 여성본부의 파트너로서 '6.15공동위원회 북측위원회' 내에 '여성분과위원회'가 발족됨으로써 남북여성교류의 상설적인 연대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그간의 관계를 통한 신뢰와 기대가 한 몫을 담당하였다고 본다.

(2) 민족공동행사 여성상봉모임

평양에서 열린 '6.15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행사 중 6월15일 오후에 열린 '여성부문상봉모임'은 <조선민주여성동맹> 청사를 방문하여 남북해외여성 대표자들의 모임과 조선여맹 선전대 회원들의 환영문화행사로 진행되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의 조선여맹청사를 공식적으로 방문한 행사였으며 남북여성해외대표의 간담회는 남,북,해외 각 지역의 여성운동을 소개하며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에서 8.15민족대추전 기간에 열린 여성상봉모임은 8월16일 오전 여성개발원에서 '8.15남북해의여성연대모임'이란 명칭으로 개최되었다. 남북해의여성대표 130여명이 모였으며, 6.15공동선언 실천과 전쟁반대와 관련된 주제로 남북여성의 대표 연설과 남측 여성본부 참가단체의 평화통일관련 활동영상을 상영, 민족통일선언 낭독, 환영문화공연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6.15선언 이후 남측에서 민족공동행사를 한 이래 처음으로 숙소 밖에서 멀리 떨어진 여성들의 공간에서 여성상봉모임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3) 2005남북여성통일행사

'6.15공동선언실천과 반전평화를 위한 2005남북여성통일행사'는 '6.15공준위 남측 준비위 여성본부와' '6.15공준위 북측준비위 여성분과위원회'의 공동주최로 2005년 9월10-14일 평양과 묘향산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남측은 100명이 참가하였고, 북측은 300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남북여성통일연단'을 개최하고 여성 및 교육 관련시설, 평양산원, 장광유치원, 모란봉제1중학교, 만경대소년인민문화궁전, 수예연구소 등을 방문하고 북측의 다양한 문화시설을 참관하였다. 행사에 앞두고 8월5일 개성에서 '북측여성위원회'에게 차량2대와 앰프시설을 지원하는 인수식을 가졌다.

성파로는 첫째, 분단 이후 최초로 남측 여성대표단 100명이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여성의 교류협력의 의지를 확인한 일이며 둘째, 고도의 정치적 도시 평양과 북의 많은 지역과 시설, 여성시설과 제도 등 전에 접하지 못했던 북의 현장을 봄으로써 북의 체제를 구체적으로 대면하였다는 점이다. 또 북측 여성들의 정치적인 입장과 의 직나라한 만남, 소통의 어려움 등 보다 구체적인 교류를 통하여 북측 여성과 사회 현실에 대해 이해를 높인 점이다. 셋째, 2002년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여성통일대회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남북여성통일행사로서 남북여성통일행사의 경제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넷째, 6.15남측 여성본부 발족 후 여성본부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통일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다섯째, 남측의 다양한 여성들이 남북여성공동행사에 참여하여 각자의 다양한 입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함께 남북여성교류의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였다는 점이다.

한제 및 과제로서 첫째, 이질적 문화와 행동방식에 대한 문화적 충격을 승화하고

구체적인 비전과 대안을 위한 깊은 성찰과 연구가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늘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객관적 조건과 남과 북의 여성들의 상호 입장과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때려가 고려되지 않으면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남북여성교류가 실현될 수 없다. 남과 북의 여성들이 서로의 현실의 한계를 넘어 원칙과 동시에 전략적인 유연성과 상호간의 정서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여성 공동의 아젠다를 보다 구체적인 토대 위에서 개발하여 한반도 평화와 여성교류에 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이 실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기타 경제협력활동

여성본부들 중심으로 한 남북여성교류 외에도 2005년 지속적으로 추진된 교류사업은 북한 어린이를 위한 빵공장이다. 2005년4월1일부터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여성위원회>는 평양에 소재한 '대동강어린이빵공장'을 통해 하루에 빵 1만개를 생산하고 있다. 이 빵은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분배되고 있다. 남측은 기계와 빵 재료를 매달 제공하고 북측은 건물과 인력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위원회 사업에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북녘어린이 영양빵 사업본부'로 발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 남북여성교류의 새로운 전환을 위하여

1) 전환을 위한 성찰, 한계 찾기

(1) 주제와 참여의 제한 그리고 남북민간여성교류의 자율성 문제

향후 남과 북의 여성은 남북교류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얼마나 발휘하며 정치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서 보다 자유롭게 정치적 한계를 넘어 여성을 말할 수 있을까.

(2) 인식의 차이를 넘기 위한 과제

북한의 여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북의 구조적 요소와 특성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북에 대한 이해 및 차이를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공

존할 수 있는 토대가 있는가, 남북 여성간의 갈등을 논하기 이전 남남여성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훈련의 장이 있는가,

(3) 경제협력여량의 문제

북의 여성대중을 돕는 방법은 무엇인가,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남북여성간의 계층화현상을 막기 위해 경제협력사업 및 지원을 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가.

(4) 남북여성교류 지원 법 제도 구축과 협의를 위한 시스템 부재

통일과 여성에 관한 바인드를 겸비한 민관협력시스템의 형성은 어느 시점인가.

(5) 남과 북, 한반도와 그 주변의 군사주의 문제를 바꿀 수 있는 평화능력이 있는가

통일에 관한 여성의 자기정체성은 무엇인가, 남과 북이 갖고 있는 군사주의에 대하여 여성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가. 통일운동의 현실에서 통일을 향한 평화적 방법, 과정에 대하여 동의하는 지점이 깊은가.

2) 남북여성교류의 목표와 정책기조

남북여성교류의 목표이자 기본방향은 여성주의통일운동의 한 과정으로 분단을 해소해가는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에서 여성의 소외를 막고 통일과정에 여성의 참여와 권리를 실현하여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통일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전개되고 있는 남북여성교류의 현재 지점은 정부의 통일과정 3단계 중에서 이른바 제1단계인 화해협력단계에 있다. 화해협력단계에 있어서 남북여성교류의 정책기조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냉전구조를 해체하며 남북간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는 일과 함께 남북 여성간의 교류협력은 여성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활성화, 제도화하는 일이다.

3) 남북여성교류 정책과제

(1) 남북여성교류의 법제화 및 인프라구축

남북여성교류의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남북관계법령의 제정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성인지적 관점과 양성평등의 원칙에서 여성의 참여와 지원을 보장하는 법조항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여성주의 남북교류의 필요성을 설득해내고, 남북관계기본법 제정과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2) 통일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확대

정부의 각 교류협력기구 및 통일과정에서 여성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통일의 전 과정에 여성이 대표로 참여하여 의사결정권 행사를 통해 여성을 위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부문별 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에 남북 상호 적절한 수의 여성인력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 북측과 협의를 통해 남북교류기구에 30% 이상 여성참여를 기본원칙으로 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3년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거론된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에 '여성분과'를 설치하는 일을 요구하며, 장기적으로 민과 관의 여성이 공동 참여하여 여성통일정책을 총괄하는 여성독자기구인 '남북여성추진협의회' 구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위의 열거한 일과 함께 통일 국가의 여성정책을 추진할 정부 내에 '여성통일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3) 여성독자적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남북여성교류와 여성통일운동의 발전적 전망을 위하여 여성 독자적 역량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부와 정부 간에 남북여성교류와 여성통일정책에 관련한 논의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남측 내에서 남북여성교류에 관한 통합적인 정보와 자료의 수집과 분석, 여성통일정책의 수립을 위해 정부와 비정부 간에 논의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남북여성교류의 창구와 의제의 확대, 실질적인 여성인력배치가 현실가능할 것이다.

(4) 여성·평화NGO의 역할 확대

남북여성교류는 평화운동의 관점을 지향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뿌리깊은 냉전의 청산과 무력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의 체제 자체가 보다 더 비정치화되고 탈군사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의 인권과 생명의 중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라는 관점을 가진 평화운동의 역할이 중요하다. 천북과 반북의 구도, 특정 노선을 중심한 정치투쟁방식을 넘어서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균형 있게 분석하고, 남, 북 정부 모두에게 한반도 평화방안, 대안적 통일정책을 제시하는 전문성과 대중성을 갖춘 통일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향후 통일의 오랜 과정에서 평화운동의 원칙과 전망을 갖고, 남과 북의 정책을 합리적 기준에 의해 비판하고 협력하는 NGO로서의 위상,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발휘하여야 한다. 군사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넘어 여성평화통일정책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또는 동시에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평화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5)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여성국제역량 강화

남북여성교류와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여성연대의 틀과 논거를 국제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남북여성의 교류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여성평화단체들의 국제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유엔안보리 1325결의안과 같은 '갈등분쟁의 해결을 위한 모든 과정의 여성의 참여' 이행을 결의, 권고한 국제적 근거들을 확보하여 이를 전략적으로 통일정책결정과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지구적 차원에서 '한반도 분쟁과 무력갈등해결에 여성참여'를 다룸으로써 여성평화운동이 강화되고 여성통일정책이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6) 남북여성교류 전문인력 양성

북의 여성이 속한 북의 체제가 지닌 구조적 요소, 특성, 여성들의 구체적인 생활과 의식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남과 북의 여성통일정책을 비교하며 현 시점에서 조정해나가는 전문역량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남남간, 남북간, 남북해외간, 한반도와 국제간에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전문가훈련도 불안정한 한반도의 위기관리차원에서 시급한 일이다.

5. 나가는 말

그간의 남북여성교류 흐름과 남북의 교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통일운동의 전반적 현실을 둘러볼 때 여성주의 통일관 확립의 중요성, 여성 독자적 통일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여성독자적인 통일관련 활동을 통해 여성운동의 역량을 고취시키고 가부장적인 통일운동의 지형을 여성주의 평화, 통일운동으로 변화시켜나가야 한다.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힘과 권력 중심의 통일이 아니라, 여성적 관점에서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사회약자와 연대하는 공동체적 시각을 견지한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토론 1 : 발표1과 발표2에 대한 논찬

윤 정 온

(여성주의저널 '일다' 기자)

◆ 통일에 대한 견해차와 입장

지난 6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통일은 '국가적 과제'였다.

분단으로 인한 모순된 현실과 두 개의 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기반한 통일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통일은 정치적 과제나 선언으로 슬로건으로 제시되곤 했다. 그러나 분단 후 냉전과 대결 구도로 일관하던 한반도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 6.15공동선언을 비롯한 일련의 체제 공존을 위한 움직임과 1997년부터 대규모로 탈북자들이 남한사회로 유입된 점,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건설 등 남한사회와 북한사회는 제한적이지만 서로가 접촉하는 면을 넓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 과제'로서 통일의 의미에서 보다 사회적으로 얘기되고, 두 체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합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단체제로 인한 패배 극복의 의미에서 통일인지,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남북간의 왕래를 의미하는 것인지, 단일한 형태의 어떠한 통일인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더 이상의 선언적 의미에서 '통일' 과제나 '통일염원'과 같은 단어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 통일운동진영

“이미 1997년 이래 북한의 기아실상이 알려지면서 북한동포돕기 운동을 중심으로 통일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하였지만”(머리말에서)

“북한돕기운동은 여성 사이에서 통일운동을 대중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소위 말하는 통일운동진영과 1997년에 전개된 북한동포돕기 운동과의 실질적 관계가 잘못서술되었다고 생각한다. 통일운동진영은 북한동포돕기운동이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었던 1997년 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침묵했다. 북한돕기운동을

진행했던 그들과 동참했던 사람들은 종교계와 부문운동진영들(통일운동진영에 의해 소위 부문운동이라고 치부되었던)의 활동과 노력을 통해 북한의 기아난이 남한 사회 내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인도주의에 기반한 북한돕고돕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또한 북한돕기운동이 '우리돕고돕기운동'으로 일부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었던 점은 감안하나, 그것이 통일을 지향한 '통일운동의 대중화'라는 규정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통일운동이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통일 열망과 민족담론이 부정될 수는 없다. 2002년 전 국민을 분노와 열기로 몰아넣었던 촛불시위에서 드러나듯이, 여전히 민족담론은 평화운동을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3. 통일운동과 통일정체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먼저, 민족담론이 평화운동을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먼저 통일운동이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 의문이 된다. 미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우리 민족끼리 공존할 수 있는 체제를 주장하는 점에서 민족주의 담론에 기반하고 있지만, 통일운동이 상정한 민족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내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의 경우 현재 그 수와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되고 있지 않다. 중국 내 탈북자들의 존재를 통해 주변 인접국과의 외교적 문제뿐 아니라,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인권침해의 정도와 인권침해의 성격이 가지는 문제이다.

통일운동진영은 식량난으로 인한 탈북이탈주민들에조차 관심을 보인 적이 없다. 반미반제국주의라는 정치적 입장에서 탈북자들은 북한 체제를 이탈했기 때문에, 미국이나 남한 정부에 의해 이들의 인권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북한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통일운동진영 내에서 탈북자에 대한 인권적 고려 및 접근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탈북자들이 겪는 인권문제는 평화운동에서뿐 아니라 한반도에서 중요한 사회문제

이고,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민족운동으로 보면, 같은 민족인데 통일운동전영 내에서는 그들이 체제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간파되고 있는 건가?

-여성통일운동, 여성주의적 통일운동과 그리고 여성주의

통일운동 전영 내에서 여성주의적 통일운동의 존재가 어떠한 형태로 존재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물론 통일운동 내에서 여성들이 존재했고 여성조직들이 있었지만, 그 내용 면에서 어떤 여성주의적 접근과 시각을 담고 있었는지, 활동했는지 의문이 든다.

또, 예로 기독교 '여성통일운동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부분에서 여성들의 통일운동을 소개하고, 곧바로 북한돕기운동의 통일운동의 대중화라고 연결되는데, 북한돕기운동이 통일운동의 대중화라는 규정에도 긍정할 수 없다.

여성주의적 통일운동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그간의 통일운동의 역사 속에서 여성주의적 통일이라는 것이 있었는가? 내용과 방법론 면에서.

◆ 통일정책과 통일교육

"여성의 주도적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첫째로 통일문제의 중요성과 여성의 능동적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성들에게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여성 대표성을 들었는데, 여성들이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여성들의 인식이 부족했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 반대한다. 그간 통일정책이, 통일이라는 화두가 지극히 정치적인 수준과 과제로 논의되었으며, 그 주체들로는 정부를 단일광구로 한 체제간의 만남과 교류였기 때문에 여성들의 참여가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통일정책과 남북교류가 고려됨에 있어서 성별 비율 비등하게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정책과 남북교류사업에서 성별 비율을 맞추라는 얘기는 단순히 생물학적 성별 비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참여하는 여성단체와 여성대표는 여성들의 정책 과정과 사업의 참여가 어떤 다른 내용과 현실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 고민을 계속 해야 할 것이다.

그간 통일이 남한 내에서는 이념지향적으로 교육되고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었으며 (반공이데올로기 혹은 친북적인 통일운동), 이념을 기반으로 남남갈등이 재현되곤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능동적 참여와 통일교육이 주장되긴 보단,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과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나아가 통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며, 통일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재고해보아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두 체제의 사람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담론이 전무한 상태이다.

‘통일교육’이 되어야 하는가부터 현재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그간 현대사에서 남과 북은 철저히 서로를 주적으로 표현했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현저히 다르다. 너무도 다르다. 교육은 서로 다른 현재의 인식과 시각차에 대해 분석하고, 공동의 연구를 통해, 어떻게 공동의 역사 인식을 해나갈 수 있는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이 하는 군축·반전운동

김 엘 리
(여성학 강사)

1. 시작하면서

전쟁, 안보, 군사영역은 관습적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왔다. 군사와 국제관계를 움직이는 주역은 남성들이었다. 역사적으로 세습되는 남성들의 지식인 군사, 국제관계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으로 인지되어왔다. 그 속에서 여성은 보이지 않았고, 마치 군사문제는 젠더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기에 여성들이 군축과 반전운동을 한다는 것은 남성중심적 전통성에 여성들이 도전하고 개입하며, 여성의 경험을 가시화하는 일이었다.

실제적으로 여성운동 내에서도 군축·반전운동은 열렬한 주목을 받지 못한 주제였다. 대중적인 여성운동으로 확산하기에는 '여성'문제로서 일상의 삶에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설명해야할 과정이 필요했다. 그만큼 낯설고 복잡한 인식의 요구되는 분야였다. 그래서 '군축운동과 반전운동에 여성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군사 영역이 여성과 무관하지 않으며, 군사영역은 일상과 엮여져있다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었다.

여성들이 반전과 군축을 위해서 무엇과 싸웠고, 어떻게 싸웠고 감내해왔는지 그 행적을 엮는 작업은 '여성'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군축이나 반전의 과제가 여성의 영역으로 진화하지 못했던 사회적 역사적 조건을 비판적으로 본다면, 여성들의 군축·반전운동사는 여성의 역사를 확장시키는 일이다. 이 글은 이를 위한 하나의 기초 작업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성들 또는 여성단체들이 전개한 군축과 반전을 위한 활동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정리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여성들이 군축운동과 반전운동을 하면서 어떤 지점에 중점을 두었는지, 무엇을 주요한 과

제로 붙들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군축운동과 반전운동을 함께 서술한 것은 운동의 차원에서 특별한 연관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군사영역이라는 성격의 유사성 때문이다. 군축과 반전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리의 관계이나, 실제적인 운동의 차원에서는 평화의식과 논리적인 측면에서 만남 뿐, 각각 다른 배경과 상황에서 진행되어왔다. 이 글에서 군축운동은 군사비 축소라는 목적에 부합한 사안을 중심으로, 반전운동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을 때 여성들이 이를 반대한 활동에 국한하여 서술하였다. 시기는 공식적 기록이 남아있는 1974년 원폭피해자지원활동에서부터 2004년까지 잡았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 이전의 활동이나, 여기 미처 담지 못한 활동들의 누락은 발로 더 뛰지 못한 필자의 부실이다.

이 글은 '여성들/여성단체들이 하는 군축·반전운동'과 '여성주의 군축·반전운동'을 구분하지 않았다. '여성들/여성단체들'이 한 활동은 가능한 한 여기에 다 기록하고자 하였다. 여성운동사에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서술하는 것은 또 다른 글쓰기를 요한다. 또한 평화운동, 통일운동, 반미운동의 복잡한 지형에서 여성들이 여성/여성주의평화운동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가, 어떻게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을 운동의 주체로 구성하여왔는가 하는 점도 글쓰기의 다음 과제로 남긴다. 이 글은 이러한 물음을 구성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차적 자료 정리의 의미를 띤다.

2. 군축운동

1) 80년대 군축운동

- (1) '진보적' 여성들의 군축에 대한 의지
- (2) 핵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
- (3) 기독교 여성들의 원폭피해자지원운동
- (4) 최후탄 추방운동

2) 90년대 이후 군축운동

(1) 방위비삭감운동

가. <방위비삭감운동을위한연대모임> 결성 -여성들의 군축의지 현실화, 복지비와 연결

나. 방위비 삭감의 공론화를 위한 활동

- 다. 엽서보내기 운동과 청원서 제출
- 라. 방위비삭감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

(2) 군 예산 집행 감시운동

- 가. 군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외정 감시
- 나. 무기도입 반대운동

(3) 일본과 미국의 군사대국화 반대 운동

3) 젠더, 일상 그리고 군축운동

(1) 여성이 군축운동을 한다는 것, 평화 이미지거나 무지하거나

군축운동 중 방위비삭감운동은 '여성'들이 해내었던,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은 운동으로 평가된다. 누구도 방위비삭감운동이 여성주의를 표방했느냐 아니냐의 질문은 하지 않았다. 누구도 하지 않았던 주제를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평가에는 복잡한 젠더정치가 숨어있다. 방위비삭감운동을 하는 동안 필자는 남성학자들이나 남성 활동가들에게 즐겨 들었던 서사구조가 있다. '평화운동은 여성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평화롭기 때문이다. 군대도 가지 않고, 여성적/모성적 품성을 지니고 있는 여성적 이미지는 평화운동에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성들이 군축운동을 하는 것보다 여성들이 앞장 서는 것이 군축운동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축운동이라면 다소 무겁고, 무섭고, 딱딱한 선입감이 있는데, 여성들이 군축운동을 한다면 대중적인 접근이 용이하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사구조는 평화라는 여성적 이미지를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왔던 군사영역에 적용함으로써, 군사영역의 남성성을 해체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실은 남성들이 하기 곤란한 것/하고 싶지 않은 것 그러나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자기분열을 '여성=평화'라는 전형성에 전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일부 남성들은 이미 군대와 같은 군사영역에 일정정도 관제를 맺고 있고, 자신의 기득권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군축운동은 자신의 성찰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이성적 사유로서 군대와 전쟁을 바라보도록 강요하는 사회일수록 남성들은 '대한민국의 남성'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 군사문제의 비판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한다.

반면, '여성'들이 방위비삭감운동을 한다는 점은 일반 남성들에게 혹은 보수적

성향의 남성들에게는 '무식하기에 가능하다'는 것으로 발화되어진다.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염서보내기 거리 홍보를 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시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하는 사람은 모두 남성이었는데, 그들의 주 요점은 '북한이라는 적이 있는데 방위비삭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였다.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방위비삭감을 주장하는 여성들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 '뭘 몰라서'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었다. 남성활동가들이 거리홍보전을 나가는 날엔 저 남성들은 군대를 갔다 왔느냐, '어떻게 남자가 무식하게 군축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더 심한 항의전화를 받았다. 이러한 남성시민들의 반응은 여성들이 하는 것은 그나마 봐주겠는데, 남성들이 하는 것은 도저히 못 봐주겠다는 의미이다.

말하자면, 여성들이 군축에 관하여 말한다는 것은 '여성'이기에 가능하지만, 전쟁을 사유하는 합리성이 부족한 여성이기에 봐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자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남성은 군축을 말하지 않거나, 말해서는 안되며, 남성답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젠더의 구분은 군사/전쟁의 영역은 남성/남성성의 영역이라는 선입견과, 전쟁은 합리적인 계산이라는 현실주의자들의 논리가 전제되어있다.

정치적으로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는 두 남성 집단에서 군축운동을 하는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젠더구조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았다. 평화운동 진영은 평화운동의 상징적 의미에서, 비평화운동 진영은 여성이 들어올 영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미 성별분업 또는 여성성/남성성의 경계를 전제하거나 작동시키고 있었다.

(2)남성중심적 안보와 군사적 사유 따라잡기

여성들의 군축운동은 국방부나 현실주의자들이 말하는 군사안보에 대한 비판이었다. 군사력은 국민과 여성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여성들이 한 군축운동은 힘의 정치 대신에 상생과 협력을, 정복의 논리가 아닌, 상호의존적 관계성의 확대를 의미하였다. 급진적이고 원본적이었다. 이러한 여성들의 주장은 1994년 이후, 인간안보라는 개념을 통하여 표현되었다. 군사적 위협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고, 위협을 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안보의 개념을 일상의 삶으로 확대시켰다. 이는 안보를 사회구조적 폭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보다 여성의 삶과 만날 수 있는 고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안보의 개념을 보다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심화시키지 못했다. 여성의 삶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출발하여 안보를 해체하거나 재구성하지 못했다. 기존의 안보라는 개념이 성차별주의 안에서 구성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점들을 군축운동의 이론적, 정책적 근거로서 분석하거나 제시하지 못했다.

추상적 구호와 합리적 언어 구사에 머물렀다는 점은 여성들의 군축운동이 여성운동, 평화운동, 통일운동 사이에서 충분히 여성주의적 전망을 관통하지 못했다 는 증거이다. 군축운동을 전개한 여성단체들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체제 구축, 여성복지 확대, 군비경쟁을 통한 전쟁위기 고조 등 다양한 지점을 언급하면서 군축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나 의미는 확장시켰지만, 군축운동의 과제나 이슈를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다소 원론적인 구호에 그치거나 그냥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보여진다. 이는 남성적인 사유체제 틀 안에서 그 언어와 논리를 따라잡는 데 집중함으로써, 여성의 입장에서 새로운 지점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 여성들이 남성적 영역으로 진출하고 남성들의 군사적 지식과 언어를 '아는 것'은 필요하지만, 여성들의 단순한 끼어들기는 남성들의 논리와 언어에 포섭되어 여성의 경험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추상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이는 군사영역의 언어와 논리가 남성중심적인 언어와 사유체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접근하였다면, '전문성'으로 간주되는 군사영역의 지식 따라잡기 보다는 일상의 여성의 경험을 따라잡았다면, 보다 여성주의 평화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 개발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지 않았을까, 당시 군축운동에 참여했던 활동가로서의 생각이다.

(3) 일상과 군사영역 사이에서

그동안 여성들이 한 군축운동은 여성인권운동처럼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활동이 요구되는 성격이라기보다는 일회적 성격이 강한 사안별 활동이었다. 말하자면, 군축운동은 사건이나 정세에 대한 대응이거나, 군사와 국제관계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활동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군축운동은 마치 일회적인 운동으로 끝나는 것과 같은 단발적인 성격을 보였다. 비록 방위비삭감운동이 다른 이슈와 다르게 5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군축사안과 관련된 운동은 실제적인 성과 없이, 해당사안이 정치적 생명을 다하면 운동도

함께 끝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적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 운동을 넘어서서 정치적 조건 자체를 재편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운동이 되기 위한 군축운동이 절실했다.

사실상 일상과 군사영역은 분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축관련 사안과 현실적인 군축운동은 여성과 일상과 결합되지 못한 채, 군사영역의 정책적인 차원에서만 중점을 두고 있었다. 여성주의 평화운동의 내용이 개발되어야 할 지점이다.

또 다른 지점에서 일상적 군축운동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삼존하고 있었다. 90년대부터 여성들에게 주요한 과제는 군축운동을 어떻게 대중적인 운동으로 전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군사비와 여성복지비와의 관련성도 찾고, 무기장난감, 군사문화 등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군사적 폭력을 짚어내고 비판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대중적인 공감과 설득력을 갖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다.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국가안보에 도전하는 일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국가안보는 자신을 구성하는 정체성이자(김엘리, 2005), 자신을 감열하는 회로권(권혁범, 2004)이었기 때문이다. 여성단체들의 군축운동도 조심스러웠다. 결국 방위비삭감운동이나 군예산문제, F-X 무기도입 반대운동은 비합리적인 군 행정 문제의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더 설득력을 가졌다. 여전히 국가안보 담론을 어떻게 여성주의의 입장에서 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속적인 과제로 남았다.

3. 반전운동

- 1) 걸프전쟁과 반전, 반파병운동
- 2) 무력분쟁지역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 증대
- 3) 한반도의 전쟁 위기와 평화정착을 위한 활동
- 4) 911사태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
 - (1) 반전운동을 위한 연대체 결성과 흐름
 - (2) 반전운동의 다양한 전개
 - 가. 사이비 운동의 활성화
 - 나. 여성의 경험 가시화
 - 다. 여성국회의원과 여성단체의 공동 활동
 - 라. 아프간/이라크와의 연결

5) 반전운동의 다양화

(1)젠더, 정체성 그리고 반전운동

2001년 911이후 여성들의 반전운동은 '자신의 위치'에 따라 또는 '평화를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각각의 연대모임을 구성하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내용과 전략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90년대의 반전운동과는 다른 점이었다. 90년대 초, 중반 여성단체들의 반전운동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생명의 죽음을 반대하고, 아들의 파병을 반대하는 논조가 주류를 이루었다. 연대모임의 이름 자체도 '어머니 모임'이며, '어머니'가 주는 사회적 이미지는 죽음과 정복이라는 군사적 사고와 대비되는 살림과 돌봄의 상징성을 띠었다. 어머니의 담이란 애절하고 절박하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설스러움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90년대 여성들의 반전운동은 정형화된 민족의 어머니,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의미화된 모성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채 이를 차용하면서, 여성=평화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그러나 후 여성들의 반전운동은 다양한 목소리로 이루어졌다. 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따로' 반전운동을 전개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컸다. 그러나 동시에 사안에 따라 '함께'하는 탄력성도 보였다. 여성들은 911사태 이후, <반전 여성평화행동>이라는 한시적인 연대기구를 결성하여 반전의 목소리를 '함께' 모으기도 하였다. 또한 여성인권의 문제를 강조하는 10.8 반전집회에서는 함께 퍼포먼스를 연출하였다. 여성들은 모이고 흩어지고, 쪼개어 모이면서 '여성들만'의 독자적인 연대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다른 사회시민운동단체들의 반전운동에도 '함께' 하였다. <전쟁반대 평화실현공동실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등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전국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여 여성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운동의 과정에서 나타난 젠더 감수성의 부족은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나 <여성해방연대>의 비판이 되기도 하였다.

여성들만의 독자적인 연대가 '따로' 조직될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였다. 전쟁, 안보, 군사주의가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하기에 여성의 경험이 남성들과 다르다는 인식은 여전히 여성들만의 조직을 필요로 한다. 여성의 경험이 '인간'이라는 보편성과 중립성에 포장되어 가시화되지 않거나 무시되는 현실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전쟁의 의미를 읽고 여성의 삶을 주체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은 또 다른 반전운

동이 필요함을 함축하였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성들의 반전운동은 여성들 간의 차이를 노출시키는 장이 되었으며, 여성들 내에서 상이한 운동의 방향과 방식으로 다양화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2)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글로벌한 연대

911 이후 여성들의 반전운동은 글로벌한 시민의식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반전운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이든,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반대이든 반전의식을 한반도의 이익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쟁체제와 얽혀있는 글로벌한 폭력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하려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돋보였다.

90년대부터 반전운동은 한반도의 분단과 분단으로 인한 무력갈등의 불안, 이의 해소를 위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사고가 바탕에 깔려있었다. 사실상, 한반도가 분쟁지역이므로 한반도에서의 반전운동은 역사적 경험으로 인한 반전의지이자 필연적이었다. 그런데 반전군축운동이 분단해소를 위한 통일운동의 맥락에서 진행되다 보니, 민족주의에 기반한 반미운동으로 또는 극단적 민족중심적인 운동으로 치환되는 경향이 때론 있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민족주의 운동은 남성적 국가주의와 결합하면서, 반전운동을 마치 남성주체들 간의 논쟁과 다름으로 만들었다. 전쟁을 일으킨 자나 이를 반대하는 자나 남성중심적 국가주의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반전 집회 때마다 종종 거행된 성조기 훼손이나 시위 때 마다 즐겨 외쳐지는 'Fucking USA' 구호는 외세민족이라는 구도를 답습하는 듯 했다. "미국에 반대하는 한국"이라는 등식을 만들으로써 사회적 약자들 간의 국제적 연대를 차단시킬 우려가 있고¹⁾ 개인을 국가와 동일시함으로써 "전쟁에 반대하는 여러 목소리들을 하나로 묶어버림" 위험성이 있다. 전쟁은 일상의 폭력과 같은 맥에 있으므로 오히려 모든 폭력에 반대하는 것이 반전운동임을 주장한다(2003.4.25일자). 반전운동이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에 갇힌 위험성은 파병반대운동에서도 잠재해있었다. 파병을 찬성하는 사람들이나 파병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국익'이라는 보편적 기준에 준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그래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담론이 필요하고, 그것은 반전평화의 담론이라고 말한다(오김숙이, 2003).

그래서 일부 여성들/여성연대는 국가를 주요행위자로 간주하여 국가와 국가의

대결 속에서 전쟁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으로 반전운동을 전개한다.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국적이 아니라, 힘의 논리를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에서 출발하는 반전운동이다. 이러한 글로벌한 반전운동은 일상적 삶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리하게 포착하는 감수성에서 시작한다.

4. 맺으면서

80년대는 주로 '진보적' 여성들과 기독교 여성들의 활동으로 군축운동이 전개된다. 당시 진보적 여성들 중에는 기독교 여성지도자들이 많았으므로 두 흐름의 운동의 성격은 중첩되기도 한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기독교여성들은 교회여성들의 대중적 참여를 위하여 점점 독자적인 활동을 구축하고 사안에 따라 연대하는 유연성을 갖는다. 80년대의 여성들의 군축운동은 민족민주운동의 이념 안에서 선언적인 성격을 띠다가 90년대 이후에는 방위비삭감, 군예산감시, 무기도입반대, 일미신가이 드라인 반대, MD체제 반대 등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군축운동은 여전히 소수의 여성들/여성단체들이 하고,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각계의 여성단체들이 연대를 하는 형태를 띤다.

여성들의 '조직적인' 반전운동은 1991년 걸프전 반대운동에서 시작하여 소말리아 파병반대, 동티모르 독립운동을 둘러싼 인도네시아의 반인권적 탄압 반대, 한반도 전쟁 반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 반대, 한국군 파병 반대로 이어진다. 90년대에는 여성단체 소수가 하는 일회적인 운동의 성격을 띠었다면, 2001년 911이후 여성들의 반전 활동은 역동적으로 확대된다. 이는 여성평화운동을 고유사업으로 한 전문적인 여성평화단체나 모임들이 97년 이후 등장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90년대와는 대조적으로, 911이후 여성들의 반전운동은 상이한 위치와 입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여성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여성들 간의 입장 차이에서, 남성과 여성들 간의 다른 관점 사이에서 '여성들'을 만들어가는 움직임이 싹트기 시작한다. 전쟁이나 평화개념을 다시 구성하고, 여성들의 경험을 의미화하고 해석함으로써 여성들이 하는 평화운동에서 '여성주의' 평화운동으로 돌고를 터기 시작한다.

군축운동과 반전운동에서 나타난 여성들의 행보도 80, 90년대에는 한반도의 이

해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점점 민족,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평화운동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군축, 반전운동을 통일운동으로 국한하는 경향이 약화되고, 글로벌한 시민의식이 혼재된 채 복합적인 평화운동의 성격을 띤다. 그만큼 군사영역에서 도 전해야 할 과제들이 다양한 지점으로 구성되어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음을 함축한다.

앞으로 군사영역에 대한 여성들의 활동은 대중적인 여성운동으로, 군사주의자들에 대한 투쟁과 탈군사화운동으로, 평화운동 내의 성차별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 기본적인 세 가지는 그동안 여성들이 풀어왔던 과제이자 비전이다.



여성인권과 평화운동

최이윤정(또하나의문화 사무국장)

조영주 (한국여성연구원 연구원)

1. 시작하며

평화운동이 국익의 논리와 국가를 중심으로 한 안보에 의해 개인의 인권이 희생되어온 역사를 드러내고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지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평화운동 안에서 여성인권의 이슈는 '여성'이라는 특수한 문제이거나 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 분단은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기도 했다. 특히 전쟁의 경험과 분단이라는 상황은 군사력 확보와 증강을 기반으로 한 국가안보에 우선적 가치를 매김으로써 군대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와 군사주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게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전쟁과 군사주의에 의한 여성인권의 문제가 여성평화운동에서 어떻게 제기되어 왔는지 살펴보려 한다. 구체적인 인권 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활동으로 여기서는 지난 1990년대부터 시작한 일본군'위안부'운동, 기지촌 여성운동, 군가산검제 폐지운동을 주로 살펴보면서, 그 의미와 성과를 여성평화운동의 역사 속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2.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

1)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전개

- (1) 명명의 정치화: '정신대'에서 일본군'위안부'로
- (2) 국내의 진상규명과 생존자 지원 활동
- (3) 유엔 권고와 2000년 '국제법정'

(4) '식민지 지배'와 '전쟁 시 여성인권' 문제로서의 활동

- ① 식민지 하의 민족차별적 요소가 강하게 결부된 문제로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 ② 전쟁과 군사주의 하의 여성폭력

2) 여성평화운동으로서 일본군'위안부'운동이 가지는 의미

(1) 여성의 관점으로 새로운 역사쓰기

일본군'위안부'운동은 한국 사회의 식민지 지배와 과거 청산 문제를 인식, 해결 해가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도전이자 변화를 가져다 준 운동이었다. 소위 과거 청산과 역사 문제는 이제까지 문서나 자료 등의 공식적 기록에 의한 남성중심적 서사였으며, 전쟁에 관한 담론에서도 여성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피해로 축소되거나 아예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20여 년간의 일본군'위안부'운동은 전쟁을 남성들의 행위로 기록하고 역사화했던 남성중심적 서사에 묻혀 사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던 여성들의 경험을 공식적 차원으로 다루게 했다. 이제 피해자의 경험은 더 이상 개인의 수치스러운 피해가 아니라, 남성의 여성에 대한 억압정치 통제라는 가부장적 국가와 군사주의가 긴밀히 공모한 체계적인 국가의 여성 폭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대협>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애 조사와 증언집과 같은 증언과 기록 활동을 지속해 오면서 지난 1993년부터 현재까지 총 6권의 증언집을 발간했다. 증언집 작업은 단지 잊혀진 역사를 기존 역사에 채우는 자료적 가치를 넘어, 여성들의 역사쓰기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역사쓰기 작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초기에는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던 증언집은 그동안 증언의 채록 방법이나 인터뷰 방식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할머니들이 직접 사용한 말투를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했고, 그 내용에서는 피해 시기만이 아니라 생애사를 중심으로 현재 생활까지 담겨져 있다. 정리자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던 초기에 비해 이제는 인터뷰한 사람의 질문 내용과 대화 내용, 그리고 정리자의 감정과 생각도 함께 들어가는 식으로 내용이 추가·보완되고 있다.

여성주의적 역사 쓰기 실천하는 과정은 비단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사 집필 작업과 기존의 역사를 재해석, 재구성하는 작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은 여성의 관점에서 역사교과서를 공동집필했으며(윤미향, 2003:17),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전쟁을 경험한 우리 역사 속에서의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를 역사화하는 “동시대 속에서의 증언” 작업으로서 가부장제 근대, 탈냉전의 역사를 다시 쓰는 일로 확장되고 있다.

(2) 민족주의를 넘어 여성들의 차이에 대한 고민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식민주의’ 하의 ‘전쟁 시 여성인권’ 문제라는 다소 복합적인 맥락에 놓여 있는 주제이다. 피해 여성들의 맥락상의 차이는 주로 민족, 국가 간의 차이로 설명돼 오면서, 한국 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 여성들의 피해보다도 한국, 우리 민족을 유린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 반일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민족문제로 이해된 측면이 많았다. 기존의 시민사회 및 진보 운동 전경에서조차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피해 여성들의 성폭력 문제는 드러나기 어려웠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민족 문제 즉, 일본에 의한 한국 침략 전쟁에 대한 죄와 책임의 문제로만 볼 때, 다른 여성들의 비슷한 피해 경험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민족주의 담론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자칫 민족 운동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다. 민족 담론 안에서 여성은 민족의 성원으로서 주체가 되지 못하고 남성 민족 주체의 대상이거나 희생자라는 불평등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김은실, 1994; 일레인 김·최정무, 2001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전쟁 시 여성폭력의 문제로 알려지게 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민족 문제를 넘어 다른 나라의 피해 여성을 만나고 전쟁과 군사주의, 가부장제에 의한 폭력이라는 피해의 공통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해의 공통성만을 강조하다보면 자칫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놓칠 수 있다. 여성들의 위치가 동일하지 않듯이, 동일한

피해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운동의 국제 연대 활동을 통해 여성의 차이를 드러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일본군'위안부'운동은 기존의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왔던 평화운동 내에서 전쟁과 군사주의에 의한 여성들의 피해에 대한 공통성과 차이를 얼마나 민감하게 인식하고 고민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는 기존에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적인 민족주의와 민족주의적 운동방식에 대한 성찰과 비판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해지는 평화와 인권 운동 영역에서 차이를 인정한 연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한국의 이슈'에서 전시 성폭력으로 '아시아, 글로벌 이슈'로의 확장은 여성들 간의 차이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같이 미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지나쳐버린 채 단지 피해의 공통성만을 강조할 우려가 있다³⁾. 중요한 사실은 각국의 피해여성들의 서로 다른 경험과 맥락을 삭제하지 않은 채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다. 국내의 이슈와 글로벌 이슈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민족주의로 환원되지 않으면서 위치성을 성찰하는 방식, 즉 성, 계급, 민족, 국가 등에 의한 억압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지점을 보는 관점이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3) 여성인권예 대한 문제제기와 반전운동으로의 확대

일본군'위안부'운동은 일본군의 승리를 위한 군의 사기 충전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와 군대가 여성의 색욕일타를 어떻게 집단적으로 동원, 활용했는지 보여줌으로써 국가안보, 전쟁, 군사주의와 여성인권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드러내주었다. "군대 성노예 문제는 군대의 여성에 대한 조직적 성적 수탈 행위로 전의(戰戢) 고양의 수단, 보장행위, 육방, 분만, 천노와 공포의 하수구로 폭력을 합법화하는 군대 메카니즘과 일치된 것"(다카사토 스즈요, 2000)으로, 일본군'위안부'의 문제는 "전쟁이 여성의 성을 통제하는 극단적이고 전형적인 사례"로 알려졌다(감일리, 2002). 그 속에서 일본군'위안부'운동은 점차 평화와 인권교육의 활동으로 그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금도 각국에서 전쟁 중의 여성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3) 이 부분은 2005년 충북 60주년 기념 한국여성학회 학술대회의 신혜수 발표에 대한 김수전씨 토론을 인용한 것이다.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군'위안부' 문제가 국제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성과를 거둔 만큼, 이에 대해 생존자들이 살아 있을 때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기록되는 것은 평화운동의 한 성과로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활동가들은 지적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일본군'위안부'운동은 하나의 해결 방법을 마련할 수 있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줄일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군'위안부'운동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현재 일어나는 전쟁에 대한 반대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성으로 전쟁을 경험한 군'위안부' 피해자인 할머니들은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수요시위 등을 통해 반전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들은 "남의 나라 전쟁에 희생되는 것은 우리로 족하다며 우리 젊은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라"(2004.6.23 612차 수요시위 성명서)고 외친다. 이는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전쟁에 반대한다,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여성으로서의 전쟁 경험은 대부분 전쟁터로 동원되는 남성들의 경험과는 다르며, 무력을 동반한 전쟁 상황의 폭력 속에서 자신이 받은 억압의 경험 즉, 여성의 몸이 전쟁터가 되어야 했던 피해자의 경험은 여성평화/반전운동의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

3. 기지촌 여성운동

기지촌여성운동은 1970년대부터 송탄과 군산 기지촌에서 활동해 온 김연자로부터 시작된다. 김연자는 25년간을 기지촌 여성으로 살았으며 자치활동을 통해 포주들과 미군들의 부당한 폭력이나 학대 행위에 대응하고, 기지촌 성매매의 실태와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세상에 알렸다. 김연자와 같은 기지촌 여성들의 활동과 더불어 의정부에 <두레방>이 개원하면서부터 조직적으로 기지촌여성운동은 본격화되었다.

4) 2003년 10월 8일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및 한국군 이라크 파병 반대" 578차 수요시위, 2003년 12월 3일 "더 이상 희생자를 만들지 말라!!" 이라크 파병 반대 및 586차 수요시위, 2004년 6월 23일 "放 김선일 씨를 해도하며... 젊은이들을 죽음의 사선으로 내모는 이라크 파병을 즉각 철회하라!!" 612차 수요시위 등.

1) 기지촌 여성운동의 전개

(1) 성매매근절을 위한 운동

- ① 1986년 3월 두레방 설립, 현재 외정부시 고산동에서 활동
- ② 1996년 새움터 설립
- ③ 1990년대 후반 외국 여성의 유입으로 기지촌 여성운동의 내용 확장

(2) 여성인권과 SOFA 개정운동

- ① 기지촌 지역은 일반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데다, 미군들과 접할 기회가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미군범죄의 발생 비율이 높음. 기지촌 여성은 미군에 의한 범죄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미군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함. 이는 '주한미군치위협정(이하, SOFA)'의 불평등함으로부터 기인.
- ② 김연자를 비롯한 기지촌 출신 운동가들은 주위 동료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예) 1977년 이복순 사건, 이영순 사건 등

- ③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와 기지촌 여성운동단체들의 연대활동. 현재 <두레방>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실행위원회와 여성인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 ④ 2000년 8월에 예정된 한미간 주한미군치위협정 개정협상을 앞두고 <평화를만드는여성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을 결성. 7월 24일-8월 2일까지 "미군범죄공식사과와 SOFA 전면개정을 위한 국민행동주간"으로 선포하여 불평등한 SOFA의 전면 개정을 위한 국민의 여론형성을 모색. 9월에는 <새움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공동으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소파개정 시에 신설해야 할 여성인권조항들을 제안하고 국회의 입법 청원서 제출.

(3) 군사주의 반대 활동

- ① 미국의 Zero Tolerance, 미군기지 채배치 등 기지촌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비판.

- ② 한국 정부의 국가 안보 논리와 군사주의에 비판하고 대안 마련.
- ③ 2000년 결성된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에 두레방 등 6개 단체 결합.

2) 여성평화운동으로서 기지촌 여성운동이 가지는 의미

(1) 민족주의 담론과 국가안보 논리에 대한 문제제기

기지촌은 성매매 일반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대가 미군이라는 것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때문에 특수한 지향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기지촌 여성의 문제는 '반미'의 문제, 즉 민족의 문제로 여겨지면서, 기지촌 여성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해 여성주의자들과 기지촌여성운동가들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남성주의적 민족주의 운동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국의 군인이 우리 민족 구성원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만 분노했고, 기지촌 여성에게 자행되었던 수많은 미군범죄를 '여성'에게 저질러지는 범죄가 아닌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민족 사이의 모순으로만 설명했다는 것이다(새움터, 2002).

한편으로 기지촌 여성운동가와 여성평화운동가들은 기지촌 여성문제가 국가안보의 논리와 닿아 있다는 것을 밝혔다. 정유진(2001)은 주한미군범죄의 공분화/정치화를 방해하는 몇 가지 관점들 중 하나로 "미군 주둔지역 태춘 여성에 대한 범죄는 한 국민 전체 피해와 구별"을 꼽으며,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폭력의 본질이 흐려지게 됨과 동시에 또 다른 폭력을 양산해내는 구조를 볼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기지촌 여성운동가와 여성평화운동가들은 군사안보를 중심으로 한 국가안보에 의해 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안보'를 제안하며 총과 칼로 외국 군대에 의존해 온 군사안보는 사람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인간안보'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정유진, 2001:345; 심영희, 2005).

이렇듯 기지촌 여성운동가와 여성평화운동가들은 기지촌 여성문제의 본질을 흐리

고 왜곡하는 남성중심적 운동집단의 민족주의 담론과 국가의 '국가안보'의 논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함으로써 개인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평화운동으로서 기지촌 여성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2) 기지촌 현장에서 출발한 평화 의식

기지촌 여성과 기지촌 여성운동가들의 SOFA 개정운동과 미군 및 군사주의를 반대하는 활동들은 기지촌에서의 이들의 경험에서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활동의 과정은 폭력과 군대를 반대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평화 의식을 형성하고 확대시키는 과정이었다.

기지촌 여성들의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인식은 주위 동료들을 돕고 지원하는 활동으로 확장되고 있다. 기지촌 여성이었던 김연자씨와 그의 동료들이 동료의 죽음과 범죄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하기 하였던 역사가 현재까지도 이어지며 기지촌 여성운동의 힘이 되고 있다.

기지촌 여성들은 일상에서 폭력을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과 미군이 행하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실천을 벌여 나가고 있다. 실제로 기지촌 여성들은 스스로 실천을 결심하고 꽃을 만든다거나 직접 집회에 참여하는 등 전쟁에 반대하는 실천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기지촌 여성들이 '평화운동'이라고 명명하거나 스스로 평화운동을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자신이 겪는 문제의 구조를 밝히고 그 구조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통해 군사주의와 전쟁을 반대하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지촌 여성운동가들은 기지촌 여성들과 자신들의 변화의 과정 그 자체가 평화운동이라고 여긴다. 기지촌 여성들이 겪는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맞물려 있는 문제이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과정이 다시 개인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현장에서 여성들이 일구는 평화운동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기지촌 여성과 기지촌 여성운동가들은 SOFA를 개정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동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폭력을 반대하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개인과 사회가 변화해나가는 그 과정들을 중요시하고, 그러한 활동들을 일상과 현장에서 스스로 일구어나가려고 노

력하고 있다.

4. 군가산점제 폐지운동

- 1) 군가산점제 헌법소원과 폐지과정
- 2) 군가산점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
 - (1) '남성 VS 여성'이라는 성대결 구도
 - (2) 사회적 약자와 인권 문제가 빠진 논쟁
- 3) 성역화된 징병제에 대한 여성주의의 도전

군가산점제 논쟁은 한국사회에서 군대, 병역의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여성들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군가산점 위헌 판결과 그 이후의 논란은 단지 군복무에 대한 보상정책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병역과 국민됨'을 둘러싼 국가와 남성간의 암묵적인 계약과 그 사이에서 은폐되었던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드러낸 것이었다. 군가산점제도는 사회적으로 남성이 경제적 우월성을 가진다는 증표이며 이는 곧 여성들의 노동시장의 동등한 접근을 방해하고 공적 영역에서의 남성의 강한 지배를 공고화한다. 즉 군복무를 노동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군복무와 회사 고용문제가 여전히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곧 군사화된 사회를 보여준다(김현리, 2002).

군사화된 사회 속에서 병역의무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선다. 일부 남성들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서 병역의무를 내세우며, 병역의무를 하지 않고서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군대에서 겪은 개개인의 고통스런 경험과 인권유린을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한 자의 명예로운 희생의 증거'로 사용하고, 성차별을 대가하는 여성들에게 '억울하면 군대가라'고 응수하면서 말이다(김현영, 2002:2).

이는 군가산점제 논쟁을 통해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집단(여성, 장애인 등)의 사회적 발언권, 노동권, 평등권의 주장이 내용적으로 사회적 설득력을 갖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공개적으로 드러났던 것에서 알 수 있다(권인숙, 2005:225).

군가산점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국가와 국민을 관통하는 한국사회 징병제의 성별정치를 드러내주었고 여성에게 금기시되었던 영역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군가산점제 자체만이 아니라 이들은 군대 내 폭력, 비인격적 대우, 부적응 등의 군대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현행 징병제의 문제점을 성찰할 것을 주장하고(박홍주, 2000), (남성)징병제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단체들이 “남녀 모두에 대한 모병제”를 제안하기도 했다(정진성, 2000:28). 군가산점제 폐지운동을 통해 ‘국방’의 개념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기존의 ‘군대’를 지원제로 전환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여성들의 주장(배은경, 2000:113)은 궁극적으로 남성중심적 국가 체제와 군사안보주의 논리에 기반한 군사화된 사회에 대한 성역을 허무는 여성들의 비판과 거입이었다.

5. 마치며

지금까지 살펴 본 운동들은 군사주의와 국가 안보의 논리가 여성을 어떻게 희생시켜왔는지를 보여주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식민지 하의 전쟁 시 여성인권의 문제로 전쟁과 군사주의가 여성의 억압일리타를 어떻게 통제하는가를 밝히고, 기지촌 여성의 문제는 군대와 국가 안보 논리에 기반해 국가가 여성의 인권을 어떻게 침해해 왔는지를 드러내었다. 또한 군가산점제는 군사력에 기반한 국가안보의 논리가 안보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여성들을 어떻게 이등국민화 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여성인권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은 더 이상 군대가 평화를 유지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군대가 여성, 개인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운동들을 통해 기존의 남성중심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평화운동에 문제제기 하는 여성들의 평화운동으로서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초기에 민족의 과거 청산의 이슈로 시작한 일본군‘위안부’운동은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식민지 하의 전쟁 시 여성인권의 문제로 논의해 오면서, 평화와 인권교육의 활동으로 그 활동 영역과 고민을 점차 확대·심화해 가고 있다. 기지촌 여성운동은 민족주의 담론과 국가안보의 논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함으로써 기지촌 여성 문제를 둘러싼 성별 정치학을 밝히고 여성들이 스스로 일구는 평화운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군사안점제 위한 판결을 통해 나타난 군사안점제 폐지운동 역시 ‘병역과 국민됨’을 둘러싼 국가와 남성간의 암묵적인 계약과 그 사이에서 은폐되었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드러냄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군대, 병역의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여성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여기에 문제제기를 시작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모순적인 말처럼, 군사안보에 기반한 국가안보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권의 문제를 가시화시키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대로 인해 파생되는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안보 개념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이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 군사 중심의 안보 개념은 인간, 개인의 안전과 인권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평화운동에서 중요한 개념인 ‘안전보장’을 재정의 하면서 페티 벵은(2000)은 이미 “환경, 빈곤, 여성 인권, 군대 성노예제도의 책임문제 등에 함께 운동하는 것도 인간의 안전보장을 달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위의 운동들은 평화와 안보 영역에 여성인권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시키고 드러내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5) 이것은 다빈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국제정치학 고전에 자주 인용되는 문구이며, 한국의 군대 내의 곳곳에 현판으로 걸려있기도 한 말이다(권혁범, 2004:71-72).

‘여성이 하는 군축·반전운동, 여성인권과 평화운동’

오킴 숙 이

(전 여성해방연대,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2003년 3월 부시와 블레어가 이라크 침략 개시 ‘중대 발표’를 생중계하던 날을 기억한다. 갖은 명분과 미사여구로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이들의 거침없는 말과 당당한 얼굴표정. 당시 나는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이 머물던 요르단의 어느 숙소에서 누군가의 두드림으로 자다 깨어 TV 앞에 앉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는 그들에 대한 증오심과 함께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커져갔다. 참 어이가 없었지만 그들의 발표로 전쟁 ‘병’자들은 가동되었고 이라크 사람들에게는 삶 대신 죽음이 현실이 되어 찾아왔다. 그러한 가운데 안방에서 가만히 전쟁 발표를 시청하는 ‘시청자’, ‘방관자’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서로를 만나며 평화운동의 물결을 만들었다. 내가 사는 하늘과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움직였고, 그렇게 거리에서 만나 ‘전쟁반대’를 외치고 ‘평화’를 노래했다. 그 목소리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목소리이었으며 그 안에 여성(주외)의 목소리 또한 선명하게 존재했다.

주지하다시피 반전평화를 외쳐온 여성들의 목소리는 비단 이 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었다. 앞서 걸어진 여성들이 있었기에 당대 여성들은 한발 더 나아가 여성주의적 평화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여성평화운동사 발간은 한국에서 여성 반전평화운동의 궤적을 찾아 그 여성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또한 각 시기 여성들이 가

졌던 문제의식을 좀더 면밀히 따라가며 읽어볼 수 있어서 반갑기도 했다. 다음 몇 가지 주제는 여전히 내게 진행 중인 화두이자 고민이기 때문에 문제제기 차원에서 머물 수도 있겠으나, 함께 토론해 보고자 한다.⁶⁾

첫째, 여성평화운동의 개념, 더 구체적으로는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여성이 하는 군축·반전운동> 서론을 보면 군축운동과 반전운동을 함께 서술하는 이유를 ‘운동의 차원에서 특별한 연관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군사영역이라는 성격의 유사성 때문’이라고 밝히며 군축운동과 반전운동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또한 ‘군축과 반전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리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진행이 다른 배경과 상황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한 원인으로 90년대 초반까지 군축반전운동은 통일 운동의 차원에서 군축운동이 진행되어왔고, 평화 그 자체가 하나의 궁극적 목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최근 전개되고 있는 평화운동은 ‘군축’을 넘어서 군사제도 자체와 한국사회의 군사화로 문제의식을 확장시키며 실천가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여성주의 담론에서는 성별화되어 나타나는 폭력은 단지 전쟁시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일탈이 아니며, 그 근원은 일상시에 만들어진다는 인식에서 여성평화운동의 관심을 일상시기 성별화된 폭력으로 확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만약 일상시에 여성의 몸에 부착시킨 억압앨리타, 수치심, 명예 등의 개념이 없었다면, 수많은 전쟁에서 발생해온 ‘전사감각’이 여성에게 고통주기와 적(남성)에게 효과적인 전쟁 무기가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평화운동사를 ‘일상시기의 평화운동’ / ‘전쟁시기의 평화운동’이라는 틀거리에 따라 구성한다면 여성들이 전개하는 평화운동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군축(반전)운동은 일상시기의 평화운동 안에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며, 군축운동 이외의 다른 움직임이 제기하는 여성인권의 문제를 포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성평화운동의 범위를 확대했을 때, 일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여성운동의 다양한 이슈와 실천들을 여

6) ‘여성이 하는 군축·반전운동’과 ‘여성인권과 평화운동’이라는 두 편의 글에서 다루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보완하는 것은 내게는 힘겨운 일이기도 하다.

7) 실제로, 몇 년 전부터 종교적 신념에서 근거한 행동에서 확대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에는 여러 여성들, 또는 여성주의자그분들이 연대하고 있기도 하다.

성평화운동이라는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연관지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여성운동의 거의 모든 사안을 여성평화운동의 맥락에서 포괄하여 의미화해야 할지도 모를 난제가 제기될 수도 있겠다.⁸⁾ 그리고 이런 문제는 과연 ‘여성평화운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그리고 ‘여성평화운동’을 어떻게 개념 정의할 것인가라는 좀더 근본적인 차원과 연결되는 문제일 것이다.

둘째, 여성평화운동 내의 다양한 목소리에 관한 문제이다. 최근 들어 반전평화운동의 주제가 다양해짐으로써 더욱 다채로운 형태와 내용들로 구성되고 있다. 이 글에서 서술하고 있듯이 여성평화운동 내에서 ‘어머니’의 이름이 아닌 ‘여성’의 이름으로 반전평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이 때 ‘여성’은 아이들, 성적 소수자들과 함께 사회적 권력에서의 소수자라는 입장에 기반한 ‘정치적 정체성’학을 의미하는 것이었다.⁹⁾

나는 주로 소규모의 페미니스트그룹들에 의해 표방된 ‘소수자와의 연대’를 지향하는 반전평화운동이 여성평화운동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故 윤금아씨 사건에게 등의 사례에서 보듯듯이, 이들은 민족주의적 반전평화운동이 남성중심적 연사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은폐하고 재생산하고 있음을 경계한다. 이들은 여성과 아이, 장애인, 성적 소수자의 위치에서 전쟁은 다르게 경험되기에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의 관점에서 반전평화담론을 재구성하며 누구나 해야만 하는 당위적 차원의 반전운동을 넘어서고자 한다. 나는 이렇게 각자가 서있는 위치(차이)에 기반한 여성평화운동의 노력을 통해 반전평화를 위한 일상적 실천 과정이 도출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식민화하지 않는 반전평화운동의 전망 또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안보’ 개념의 재구성을 통해 평화운동에 접근하는 문제이다. ‘국가

8) 여기서 정치적 정체성은, “투쟁의 기반이 되는 것은 피부색이나 성이 아니며 “오히려 인종, 계급, 편파를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방식, 즉 투쟁 속에서, 투쟁들 사이에서 찾아내는 정치적 인종 고리의 기반이(78)” 된다는 점, 따라서 또한 전쟁의 문명으로서 ‘어머에게만 여성’을 구성하는 것은 “역사적이면서 현재의인, 투쟁이라는 공통의 맥락(82)”이라는 모한티의 주장에 근거한 정체성을 의미한다.

9)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 여성해방연대 등은 반전평화를 전개하면 이러한 구질함을 벗어났다.

안보를 중심으로 한 안보에 의해 개인의 인권이 희생되어온 역사'라는 점에서 이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과연 '안보'라는 개념이 재구성을 통해 대안적 가치를 담을 수 있을지, 안보 개념을 둘러싸고 진행된 역사적 맥락 안에서 가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인권, 자유, 평화 등의 개념이 지배에 대한 저항적 실천 속에서 구성되어온 개념이라면, 안보 개념은 주로 권력집단에 의해 제기되어온 언술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게 아닐까 싶다.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여성평화운동

안김 정 애
(국제관계학 강사)

1. 들어가는 말

여성평화운동은 여성의 힘으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고 나아가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 가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군사안보 대신 지속적인 사회발전과 인간중심의 안보가 보장되는 통일복지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분단된 한반도에서 평화로운 민족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분단의 깊은 골을 매우고 남북간의 결을 내는 분쟁해결의 적극적인 주체로서, 갈라진 민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해 가는 문화의 통합자로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민족의 화해자로서 역할을 하고, 무력분쟁과 갈등해결에 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평화를 위한 여성 지도력을 증진시켜 나갈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여성평화운동은 여성의 힘을 모아 민족의 자주적 통일과 아시아 지역의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런 목적 아래 평화정신을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확산시키고, 사회 전반의 평화행위 능력을 신장시키며 생명중심의 평화문화를 일구어 나가며, 가부장적 군사질서를 해체하고 군사안보를 인간안보로, 군비경쟁을 군축으로 전환하여 공존, 공생의 세계질서를 열어가고자 한다.

한반도의 여성들은 그동안 식민지 시대, 미군정기, 한국전쟁, 분단,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의 질곡 아래 국가안보, 군사안보, 정권안보 등에 짓눌려 왔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평화운동에 여성들은 힘을 모아 왔다.

본 고에서는 안보를 담보로 한 한국 상황에서 여성을 억압해 왔던 각종 여성정책과 법·제도에 대해 여성계가 어떻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2. 소파(SOFA)개정운동

1) 여성계 소파운동의 전개

여성계는 소파개정운동 초기인 1999. 10. 6 '불평등한 소파 개정 국민행동'¹⁰⁾ 결성을 위한 대표자 회의와 기자회견부터 여성계가 참여하였고, 11월 3일에 개최된 불평등한 소파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2000년 1월 11일의 미대사관 앞에서의 노근리 학살과 소파에 대한 항의 등에 참여하였고, 소파의 전면 개정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여성인권보호조항 신설을 요구하였다.

1. 주한미군에 의한 성매매를 금지하고 성매매 및 성폭력예방교육 실시하라.
2. 미군법령에 노출되어 있는 기지촌 여성의 인권보호와 직업재활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3. 기지반환 시 기지촌 여성과 혼혈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4. 혼혈아동에 대한 미군 아버지의 부양책임을 분명히 하고, 혼혈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양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2002년 6월 13일에 발생한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살사건은 소파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및 여성정책 과제

여성계는 3당 합당을 배경으로 탄생한 김영삼 정부의 평화·통일과 관련한 여성정책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이었다.

여성계는 대북정책의 목표를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책에 모든

10) 결성식에서 국민행동은 “한미간의 올바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 당면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서 불평등한 소파 개정이 선차적인 과제임을 인식하고, 평화와 상호평등한 국제관계의 대명제 하에 결성되었으며... 소파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모든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활동을 펼칠 것이며, 나아가 한미간에 맺은 모든 불평등협정을 개정하는데 힘을 쏟을 것을 선포하였다(장화 여성회, 녹색연합 등 106개 단체 참가/ 평화여성회 제4차 정기총회 보고서, 2000)

를 두고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둔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일명 '햇볕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의 냉전적 대결구도를 지양하고 화해협력구도로 전환하는 작업에 우선 주력하면서 동시에 대북정책 3원칙으로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태제, 남북간 화해, 협력의 적극 추진 등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6·15 남북정상회담은 이를 구체화한 결정체였다.

이처럼 김대중 정권의 대북포용정책, 햇볕정책이 평화·통일운동 분야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양적인 면에서도 큰 비약이 있었지만, 평화와 통일시대를 준비하기에는 통일정책이나 통일운동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는 아직 여성계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특히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는 현저히 떨어진다. 진단에서 여성계는 2002년 16대 대선 후보들의 평화·통일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여성의 요구를 제시하였다.

2002년 10월 25일, 여성들이 여성의 목소리를 모아 공감대를 형성하며 여성계 핵심요구과제를 집중적으로 요구하여 각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여성과제가 채택 되도록 할 목적으로, 16개 광역 시·도, 100여개 여성단체들이 '2002년 대선여성연대'를 출범시켰다. 여성계는 '여성이 바라는 10대 주요 과제'와 '여성이 바라는 60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2002 대통령 선거 주요 여성공약 요구집]을 작성하였으며, 대선연대가 요구한 평화·통일분야의 제안으로서 다섯째 과제로 '평화·통일정책에서의 여성 50% 참여확대 및 반전·평화정책 수립'이 제시되었다.

주요 정책요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여성정책담당관 확대
- 2) 평화·통일분야의 주요 심의 기구에 여성참여 확대 및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지원
- 3) 반전·평화정책 수립과 남북상호군축 실시

이외에도 "학교와 언론에서 평화교육과 평화문화를 다루도록 강요해소·관용훈련 교육, 평화심성개발교육 등 평화교육을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한국사회의 인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초의 일로¹¹⁾, 한 시사주간지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의 사면이 소개된 이후 각종 언론 매체에서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불교신자이자 평화주의자인 오태양 씨가 병역거부를 선언하면서 특정 종교만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이 인권문제 즉 국가와 개인간의 합리적인 공존, 우리 사회의 징병제와 군사문화의 측면까지 논의가 확대되었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에는 현역 이등병이었던 강철민 씨의 병역거부 선언은 반전운동의 일환으로서 논의의 지평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여성계에서는 2000년 12월 도쿄 전범재판에 참가한 평화여성회의 이김현숙 대표가 미친우봉사회(AFSC)의 카린 리와 군대폭력에 대한 관심사를 논의하던 중 양심적 병역거부와 함께 운동을 전개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하여 2003년 3월 17일-18일 파주 흥원수련원에서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인권 및 평화단체의 활동가 5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한국의 현행 징병제도와 군복무에 관한 문제점과 인권침해 실태를 토론하고, 대만·유럽·라틴 아메리카 등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행 징병제와 군복무, 무엇이 문제인가’(김창수)를 기초발제로, ‘징병제 실태와 병무관리’(김종대, 김삼석), ‘군대폭력과 군의문사’(이희숙), ‘양심적 병역거부’(조국), ‘병역미필 피해자·여성과 장애우’(정강자), ‘군대피해실태 조사보고’(최정민), ‘군대내 성폭력’ ‘한국에서 가능한 대안탐색’ 등의 토론문이 제출되어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대만을 방문, 군 복무 중 사망한 아들로 병역거부운동에 뛰어든 대모 마마 황을 만나는 등 대만 방문의 성과가 있었다. 2004년 7월 8일-12일, 대만대체복무제도 참관을 위한 한국 참관단에 평화여성회의 이김현숙 대표가 참가하고, 8월 7일에는 대체복무제도 관련 대만 평화단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벌였으나, 여성계에서는 주무를 담당할 여력이 없어서 연대회의에 일을 넘기고 여성인 최정민 씨가 중심이 되어 병역거부운동을 전개하였다.

11) 이미 2000년 3월에 대만의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고 몇몇 사회단체들이 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연대회의의 최근 글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병역거부운동이 남성과 여성의 성폭력 가해자·피해자의 구도로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징병제는 단순히 일방적인 국가권력의 강제력만이 아닌 다음과 같은 다양한 동원기제와 함께 이루어진다.

(1)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군사력 중심의 국가안보 (2) 경제력이 자주국방과 동일시되는 경제발전주의 (3) 효의 유교전통이 뒷받침되면서 근대적 민족국가를 구성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충성심 특히 군사화된 남성들의 영웅적 이야기, 여성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전사 이야기, 사선을 넘는 전우애 등은 군대경험을 의미화하는 데 주요한 담론으로 작동한다. 남성을 전사로서 만드는 이 과정에는 일상적 의식과 행위를 지배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적인 구조, 즉 남성(성)=강함=보호자=안보의 주체 / 여성(성)=약함=피보호자=안보의 객체라는 등식이 자리잡고 있다(김엘리, 2012).

여성 및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역사에 기초한 가부장적인 군사화는 차별을 정당화하고 양심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일정한 제약에 얽매 왔다.

5.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1)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성계 평가

여성계는 국가보안법은 남북한 국민들의 적대감을 조성하는 법으로서 민족평화공동체 형성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은 이미 그동안 민족통일운동의 상시적인 주제가 되어 왔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첫째, 통일시대에 역행하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남북합의서 및 6·15 정신과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반통일적 성격이 명백하다. 그 예로 국가보안법 제3조에서 북한은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헌법 제21조(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와 제19조(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에 위배된다. 특히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을

으로써 다원화되어 가는 사회적 추세에 맞지도 않으며, 국민의 정치적 참여와 자유도 제한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있다.

셋째, 국가보안법은 가치창출의 수단으로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억압함으로써 21세기를 향한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비를 가로막고 있어어서 헌법 제22조에 위배된다.

넷째, 국가보안법은 개인의 사상이나 개인의 의견을 국가가 통제하고 범칙용이나 집행과정에서도 과거에 남용되어 왔고,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인권유린을 가중하게 하였다.

여성계는 1998년 7월 23일, 탑골공원에서 개최된 여성양심수 석방을 위한 묵요 시위 촛심 등 국가보안법의 족쇄에 묶인 여성인권 회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1999년 2월 26일에는 국가보안법 철폐에 관한 토론회에 여성계가 참석하는 등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군사주의반대 여성평화네트워크, 평화여성회 등 36개 여성단체가 결합하여 구성된 반전평화여성행동이 모체가 되어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참하였다.

17대 국회개원에 즈음하여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연대에 참여한 여성계는 2004년 9월 21일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여성선언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평화여성회 외 36개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여성행동(이하 여성행동)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4년 여성계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연대에 적극 참여,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6. 9일에는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선포 기자회견' 및 대표자 회의에 참가하였고, 9월 21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여성선언 준비회의를 거쳐 9월 23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여성단체 기자회견과 서명활동을 전개하였다. 11월 3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여성행동 일일농성에 참여하였으며, 12월 16일에는 국보법폐지를 위한 여성행동의 날로 일일단식을 펼쳤다.

국가보안법폐지 1차 국민대회 투쟁 결의문이 선포된 2004년 9월 5일,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17대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대국회 국보법 폐지 촉구서한이 발표되었다.

2004년 9월 23일에 명동성당 인근에서 "국가보안법 줄임식 퍼포먼스"라는 주제

로 국가보안법 폐지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56학년 국가보안법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반국가단체구성, 잠입탈출, 불고지 등의 조항을 가진 국가보안법을 졸업자로 명기하여 졸업장을 수여하는 등 졸업식을 진행한 이 날 기자회견에서 여성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100만 청원 서명운동 및 시민과 즉석사진 찍기 등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알리는 활동을 폈다. 국가보안법폐지 여성행동(이하 여성행동)은 이 날 '국가보안법을 보내미'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여성들은 국가보안법의 조항을 일부 개정하거나 대체입법, 그리고 '폐지 후 형법 개정론' 등에 반대하여 완전폐지를 주장하였다.

또한 여성행동은 국가보안법 폐지 여성행동의 날을 지정, "하루농성과 집회"를 같은 해 11월 3일에 국회 앞에서 전개하였는데, 황당개그, 개그 콘서트 형식을 받아들여 피해사례, 악법조항 패러디를 시행하였으며, 국가보안법 피해여성 발언, 지역단체 국보법 폐지 발언, 여성선언문 발표 등을 내용으로 여성 중심의 국보법 폐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날 발표된 그리고 여성행동에서는 하루소식지를 발간, 여성행동 활동,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동향, 주요 전체 일정 등을 담은 소식지를 월간 형식으로 매일 오전 중에 각 단체회원, 언론사, 여성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발송하였다.

6. 기타 외교통일분야에서의 여성참여 확대운동

여성평화교육과 평화문화운동

김 정 수

(평화여성회 공동대표)

1. 들어가는 말

2. 평화교육의 개념, 성격, 범주에 관하여

3. 한국여성평화교육의 전개: 운동과 교육

1) 1970년대: 원폭피해자돕기를 위한 교육과 홍보

2) 1980년대의 반핵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을 위한 교육활동

(1) 반핵평화운동과 평화교육

(2) 여성통일운동과 통일교육

3) 90년대 초반 군축·방위비삭감운동과 남북여성교류·통일운동, 그 교육적 활동

(1) YWCA: 다양한 평화통일운동과 교육활동

(2) 교회여성연합회: 교회여성들의 통일화년운동과 교육

(3) 여성연합과 교회여성들의 평화군축·방위비 삭감운동: 연구와 홍보

(4) 1990년대 초반 여성연합의 평화통일운동과 단체회원교육

4) 90년대 후반의 평화통일운동과 교육

- (1) YWCA: 인도주의적 북한돕기, 탈북자 지원 활동과 교육
- (2) 교회여성연합회: 북한지원, 대인지괴금지운동, 통일교육
- (3) 여성연합: 여성평화운동과 북한지원, 회원단체 교육활동
- (4)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여성평화교육의 모색

5) 2000년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여성평화통일교육

- (1) 평화여성회: 지식, 방법론, 가치의 통합적 평화교육의 시도
- (2) 평화여성회 갈등해결교육: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문화의 확산
- (3) 여성연합: 통일평화교육의 지역 회원단체로의 확산
- (4) YWCA: 북한 이해, 탈북자 지원, 평화운동, 평화교육
- (5) 교회여성연합회: 평화문화 운동

4. 여성평화교육의 성과

법제도개선을 위한 여성평화운동 여성평화교육과 평화문화운동

차 인 순
(국회 입법 심의관)

1.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여성평화운동

■ 법, 제도의 개선이 이야기되기 위한 서술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개념적 정의

- 여성평화운동에서 “여성”은 누구인가?
- “여성평화”는 무엇을 말하는가?

▷ 내용적 정의

- “여성평화운동”의 내용은?
(1부와 연결시킨다면, 통일, 남북교류, 군축·반전, 인권·평화)

▷ 법적, 제도적 장애

- 이러한 여성평화운동을 가로 막는 법적 제도적 장애는 어떠한 것들이 있
(있)으며, 그것은 여성평화운동적 관점에서 볼 때 왜 문제인지 개요를 서술
할 필요가 있음.

▷ 제목의 문제

- 제목의 부적절성
- 예를 들면, “(여성)평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운동” 이 맞지 않는지?

■ 법, 제도 개선 운동의 서술 방식이 좀 더 체계화될 필요가 있음.

▷ 항목

- SOFA 개정운동
-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 통일/국방/외교정책 제시 (==> 기타)

▷ 자료, 설명, 비판이 혼재되어 있음.

- 개요(설명) ==> 여성평화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점 ==> 운동의 전개
==> 성과와 한계
- 설명서 내용은 주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듯

2 여성평화교육과 평화문화운동

■ 정의/ 관점의 심화

▷ 평화교육이 왜 운동이어야 했는지(운동과 교육의 연관성)

▷ 평화교육과 평화문화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 평화문화가 보다 상세히 정의될 필요가 있음.
- 2쪽 주 2)에서 평화 문화의 비전은 본문으로 처리될 필요가 있음.

▷ 교육/활동/운동의 경계가 상호 연결된 측면은 있으나 설명에서 혼동을 초래함. (예 표 2)

- 모든 행위는 다 교육적 의미를 띠 수 있으므로 광의로 해석하면 매우 광범위해짐.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내용의 이해에 도움이 될 듯.

▷ 관점의 문제가 서론에서 다루어져야 함.

- 여성평화교육이 여성주의(혹은 성 인지적)평화교육으로 발전되는 과정이 본문에서 나타나므로 서론에서 아웃라인을 잡아주면 좋을 듯.

■ 서술 내용

▷ 운동과 교육/연구와 홍보 등이 포함됨으로서 설명이 혼재됨

- 시대적 상황과 운동적 상황은 교육의 배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 연구와 홍보는 교육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한 또다른 활동으로 분류해야 할 듯.(9쪽)

▷ 교육의 내용보다 일시와 주체만 부각

- 내용 중심으로 요약되고, 일시와 자료들은 근거(주 혹은 별도 자료)로 제시되는 방식이 필요할 듯.
- 내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무엇으로 보고, 그 내용에서 '여성'은 어떻게 다루졌는지가 분석의 선(line)으로 잡혀야 할 것임.

▷ 서술방식에 대한 고민

- 연대기적 서술방식 vs 통합적 평화교육 모델에 의한 서술방식
예) 지식(주제별 분류) ==> 기술 ==> 가치

한국여성평화운동과 국제연대

정 정 안

(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1. 서론

한반도평화는 다른 이슈와 달리 그 자체가 이미 국제적 수준에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원폭피해자문제, 미군기지, 북한핵문제, 한국군의 이라크전 파병, 평화협정 등.

여성/여성단체가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은 이미 국내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행위이다. 많은 여성들이 이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거나, 느낄 수 없는 우리의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여성들은 세계정치나 세계경제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여성평화운동은 정부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수평적 연대뿐 아니라 국내외 국경을 넘어 연대를 이루어왔다. 여성들은 평화, 안보, 통일, 외교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과 통치에 개입하고자 했으며,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이라는 명분에 따라 유지되거나 확대되고 있는 군비경쟁, 외국군 문제, 전쟁 참여, 긴장 유지 등과 연계된 정책에 국가의 의사결정 수준을 과감하게 재규정하려고 시도하였다. 갈등예방과 평화문화의 확산을 위해 반평화적인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 및 활동을 하며 정부에게 정책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여성들을 교육해왔다. 정부가 풀뿌리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단체는 국내·국제적으로 연합을 이루어 “약한 네트워크의 강한 연결”로써 독자적으로는 상상도 못하던 과업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연대의 원리(solidarity)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여성/여성단체는 첫째, 평화와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이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 국제적인 질서와 타국과 관계 등 다른 영역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둘째,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개입과 참여를 위한 운동이 여성의 부문간 연대는 물론 다른 사회운동과 연대와 함께 더 나아가 국제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국제연대의 생명은 의사소통에 있다. 국제적 차원의 과제에 대하여 각국 시민사회가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어도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지 않으면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연대를 구축하기 어렵다. 하지만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여성단체의 국제연대 활동이 전보다 크게 강화되었고 정책과정 에 대한 영향력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평화단체의 입장에서 국제연대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운동의 국제화, 국제평화운동의 국내화이다. 즉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며, 또한 국제 평화운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여성/ 여성단체는 이 과정 속에서 여성이 피해자가 아니라 주체로서 여성의 세력화(empowerment)를 추구하며 연대를 통해 여성들만의 배타적인 여성연대운동이 아니라 젠더적 관점을 가진 평화운동을 확대 함으로써 평화운동의 내용과 관점의 확산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여성운동에 있어서 국제연대의 역사는 길지 않다. 국제연대활동이 국내운동을 토대로 특히 여성들이 평화문제를 주요사안으로 국제연대활동을 한 시기는 더욱 짧다. 1970년대와 1980년대 군부독재시절 시기에는 독자적인 운동으로 평화운동은 없었다. 특히 외국어능력과 국제네트워크가 필요한 국제연대운동은 거의 없었다. 다만 교회여성들은 한국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국제네트워크를 이용해 국제연대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성단체들은 1995년 이후 국제회의의 참석과 회의 조직을 통해 점차적으로 국제연대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2001년 9.11 테러이후 전쟁반대와 한반도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국제연대활동을 하였다.

이 글은 여성이 주체가 되어 여성들만으로 이루어진 국제연대 경우와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국제연대에 동참했지만 여성이 주도한 국제연대 양자를 포괄하고자 한다. 이 글은 평화와 관련한 여성의 국제연대 활동을 1970년대부터 2005년 중반까지 주제와 주요회의를 중심으로 정리한 후, 그 성과와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2. 원폭피해자 지원 국제연대

여성/여성단체의 국제연대 평화활동은 원폭피해자를 지원하는 운동부터 시작하였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한국YWCA연합회>는 태평양전쟁의 큰 피해자이면서도 소외된 피해자를 찾아 그들의 깃발한 인권을 회복하는 일을 세계교회 여성운동과 유대 속에서 시작하고 확대하였다.

3. 국제회의를 통한 연대

일반여성단체들은 교회여성과 같이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없었기 때문에 국제회의에 참가하거나 회의를 조직하면서 한반도 평화 문제와 한국여성평화운동을 소개하고, 국제평화운동을 배우면서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고 다른 해외 단체들과 협력을 도모하고 국제네트워크를 모색해나갔다. UN이 주최하거나 강대국의 정상들이 주관하는 정부 간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다양한 국가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제NGO포럼을 개최하여 단체들 사이에 세계사적 흐름을 읽어내고 협력의 틀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관련 정부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것은 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간 회의와 병행해서 민간단체들이 별도의 회의를 조직하고 그 논의결과를 모아 대정부정책압력을 넣은 방식의 비관적 개입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 여성운동단체도 정부정책의 변화를 위해 주요 국제회의에 비관적 개입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여성운동단체의 국제연대 경험이 국내활동과 침투될 수 있는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여성 평화전문단체가 집중적으로 국제연대를 하게 된다.

- 1) 1995 베이징세계여성대회
- 2) 1997 국제여성심포지엄
- 3) 1999 헤이그평화대회
- 4) 2000 아셈민간포럼
- 5) 2002 지속가능한 발전 정상회의
- 6) 여성들의 다양한 국제회의의 참가

또한 평화여성회는 '평화단체 국제연대 전략회의'를 제안하여 9.11테러이후 평화 관련 행사가 국내외적으로 많아지면서 국제연대에 대한 방향, 공동의 목표 설정, 당면현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한국평화단체 사이에 논의틀을 만들어 국제회의에 대응하였다.

4.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활동

1) 교회여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연대

남과 북의 이념적 대결이 첨예하던 1980년대까지만 해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아무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는 어느 부문보다 앞장서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왔다. 교회여성이 가진 국제네트워크를 통해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염원을 알려나갔다.

2) 남북여성의 화해협력 활동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한국여성단체는 남북 교류, 화해, 협력을 통해 평화과정과 통일과정에서 여성문제를 제기하며, 남북 적대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화해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외국여성단체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지지하기 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3)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활동-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 방미단 활동, “북핵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서명 캠페인” - 여성평화단체가 주도적으로 조직했던 국제연대활동

5. 전쟁반대 국제연대

한국여성단체들은 2001년 9.11테러 참사 직후부터 전쟁과 폭력의 악순환을 우려하며 폭력사태와 전쟁을 반대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했다. 여성들은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을 경험했고, 반세기 이상 분단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면서 겪은 인명과 재산 피해, 정신적 충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여성들은 최근의 무력분쟁에서 병사들보다 민간인, 특히 여성과 아이들의 희생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면서 여성단체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쟁을 막기 위해 연대하고 그 활동을 국제적으로 알렸다. 특히 전쟁의 확대 속에서 여성평화단체는 아시아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쟁반대를 위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아시아 지역차원에서 <아시아평화연대>라는 초국적 평화네트워크를 결성하고, 국제여성네트워크와 함께 전쟁반대, 효선이 미선이 사건 연대, 이라크전쟁 반대 활동을 하였다.

- 1) 9.11 테러 직후 전쟁반대 국제연대
- 2) 2002년 10월 8일 반전평화 국제행동
- 3) <아시아평화연대> 활동
- 4) 한국군 이라크 파병 반대 국제연대

6. 갈등해결과 갈등예방

1) 갈등해결교육

한국사회에서 갈등은 많은 경우 대결적 힘의 논리로 해결하거나 봉합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분단사회로서 권력의 문화가 발전하지 못하고 평화적 문제해결능력이 적기 때문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통일사회의 건설, 공정한 절차를 구현하고 서로 다른 요구를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갈등해결적 방법을 한국사회에서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1999년 평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미국친우봉사회는 평화와 통일사회를 이루기 위해 갈등해결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갈등해결 워크숍을 조직하고 전문가훈련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국제연대의 성과로 진행된 갈등해결 프로그램은 이후 평화여성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한국시민사회단체에서

갈등해결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평화여성회에서 갈등해결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

2) 무력갈등예방을 위한 GPPAC 활동

여성/여성단체들은 무력갈등으로 시민, 주로 여성과 아이들이 병사들보다 더 많은 희생을 당하고, 특히 무장갈등 당사자가 전쟁과 테러리즘의 전술로서 체계적인 강간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갈등예방을 위한 여성의 적극적 역할을 인식하였다. 평화여성회는 무력갈등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와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무력갈등예방을 위한 지구적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이하 GPPAC)"이라는 국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이 GPPAC 과정을 국내 시민사회단체에게 소개하고 이후 동북아지역발의단체로서 활동했다. GPPAC과정은 여성들이 주도해온 국제 연대활동이다. 2003년 제1차 GPPAC 국제운영대회부터 2005년 GPPAC 세계대회 참석자들의 대다수는 여성이었다. GPPAC 과정을 통해 여성들은 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갈등분쟁 지역의 여성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 나누는 기회를 갖고 갈등 예방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고찰할 수 있었다. ② '전쟁이 없는 상태'로서의 평화를 넘어서서 사실상의 평화 상태를 정착시키고 제도화하는데 있어서 여성평화리더십의 적극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③ 갈등분쟁예방에 대한 여성 단체, 시민사회 단체, 유엔, 각국 정부 간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상호작용 증진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했다. 특히 한국정부는 GPPAC 과정을 지지하는 GPPAC 과정을 지원하는 정부간 모임인 친구 그룹(Group of Friends)에 가입함으로써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④ 동북아시아 정치군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외교안보군사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접근을 제고하고, 군사안보정책 결정의 민주화, 투명화 등에 대한 여성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국제 경험을 했다. ⑤ 갈등분쟁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의 행동의제들을 작성하고, 이것을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논의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다. ⑥ 북핵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등 한반도 관련 갈등 주제를 동북아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⑦ 행사참가이후 2005년 8월과 11월 일본 평화헌법 개정 반대를 위한 동북아 시

민사회의 공동행동을 조직하는 등 동북아 연대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7. 군사주의와 여성인권 (고유경 글 참고)

8. 맺음말

이상에서 한국여성평화운동의 국제연대를 주제와 주요 국제회의별로 살펴보았다. 여성단체의 대표적인 국제연대활동을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성단체들이 1970년대 초반부터 2005년 중반까지 어떤 주제와 어떤 회의들을 중심으로 국제연대를 펼쳐왔는지 그 대략적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전개한 여성평화 국제연대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평화단체들은 다양한 국제경험을 통해서 평화운동 차원에서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것은 주제로서 여성이 평화운동의 국제연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초기에 교회여성이 주로 하던 국제연대활동이 일반여성단체와 여성평화단체 활동가, 평화단체의 여성실무자들로 확대되었고, 국제연대 경험을 가진 여성활동가들은 평화를 이슈로 국내사업과 국제사업을 연결하여 볼 수 있는 포괄적 접근법을 가질 수 있었다.

둘째, 국제연대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전대적 관점을 가진 국제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여성단체는 피해자 지원, 반전활동, 미군기지 반대 운동, 남북화해협력, 북한핵 문제, 인간안보, 군사주의반대, 갈등예방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여성네트워크는 전대적 관점을 가지고 여성연대를 더 확장하고 있다.

셋째, 여성/여성단체는 평화를 다루는 국제연대를 위해서 국내연대의 폭을 확대해왔다. 개별 단체 독자활동> 국내 여성단체와 연대> 국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여야 정치인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 정부·시민사회의 새로운 파트너십 추구(GPPAC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친구그룹 참여) 등으로 사안에 따라 그 연대 폭을 확대하였다.

넷째, 여성평화단체의 국제연대의 방식이 더욱 다양해졌다. 이메일 교류를 통한

정보교환, 국제회의의 참가 및 조직, 외국 활동가 국내 방문, 대표단 로비 투어, 해외 여성·평화단체와 교류, 국제평화단체의 인턴십 프로그램(WILPF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 평화문화캠페인 참여, 국제서명운동, 지역NGO네트워크·초국적여성NGO네트워크 참가, 초국적NGO네트워크 지역발의단체(GFPAC 동북아시아발의단체)로서 활동 등 국제연대 방식이 다양한 수준에서 진행되어 왔다.

다섯째, 국제연대를 통해 정책을 바꾸기 위해 한국정부 및 분쟁 당사국 및 관련 정부, 더 나아가 유엔 등에 압력을 행사한다. 그 예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평화국민행위의회의의 방미단 파견과 6개국 정부에 보낸 서명운동이 있다.

여섯째, 외국 활동가와 연대를 통해 그들의 문화와 운동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며 공존할 수 있는 평화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현재 여성운동이 주제별로 분화되고 전문화하면서 평화관련 국제연대 활동이 여성평화단체에 집중되어 국제연대를 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여성평화단체가 그 조직적인 역량에 비해 많은 국제연대를 하게 된 이유는 1) 9.11 테러이후 전세계적으로 전쟁이 확대되고 한반도 전쟁위험이 높아지는 '위기의 시기'라는 시기의 절박성, 2) 여성평화단체가 국내적이면서 국제적인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정치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정치적으로 판단한 점, 3) 국제연대 담당자들의 정치적 의지와 헌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구화시대 국제연대가 더욱 중요한 시점에 국제연대가 국내운동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여성평화단체의 인적, 조직적, 재정적 역량은 취약하고, 국제연대를 위한 인프라 역시 약하다. 지속가능한 국제연대활동을 위해 '시간의 지평'을 길게 두고 전در적 관점을 가진 정책 생산과 국제적인 감각과 능력을 가진 활동가를 배출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은 여성평화운동의 국내적 확대와 함께 국제연대를 하나의 필수 부분으로 배치하는 정치적 결단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 발표 7-2 : 국제연대 활동 중 7. 군사주의와 여성인권

고 유 경

(SAFE 코디네이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한 주제 중의 하나인 탈군사회를 위한 국제연대 활동으로 2000년 결성된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이하 <SAFE>)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이는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US푸에르토리코 여성네트워크>(이하 <여성네트워크>)의 연대제이자, 국내 탈군사회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며,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군사주의 문제에 접근하여 여성인권 사안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1.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와 인권/환경문제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모임은 1997년 5월 미국, 한국, 필리핀, 일본, 오키나와 여성들이 모인 오키나와 국제 여성회의(1회 국제여성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구성되었다.

국제 회의가 구성되기 이전 미국, 오키나와, 한국, 필리핀 여성들은 개인과 단체간의 개별적 연대를 이루어왔고 미국 군대로 인해 활동하는 각 지역 여성들의 생각과 전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단체들의 활동에 더 큰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국제 여성회의가 시작되었다.

오키나와 1회 국제여성회의는 한국, 오키나와, 일본, 필리핀, 미국 여성들이 참여하여 미국 군대로 인한 각 지역의 피해 사실들을 공유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아베라시안의 실태, 미군주둔 조약과 합의서, 환경 오염, 기지의 전환과 대한 경제 등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1회 국제여성회의의 참가자들은 차기 회의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활동의 지속성과 목적성을 위해 <미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 미국 여성네트워크(East Asia-US Women's Network Against US Militarism)>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였다.

2회 국제여성회의는 1998년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세계 모든 곳의 여성

들과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미국의 군사 정책들이 결정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안보 재정의(Redefining Security for Women and Children)”라는 제목으로 열린 회의에서는 각 지역상황 공유와 기본 토론을 진행하면서 여러 시민단체, 풀뿌리 단체들과의 모임을 개최하였다. 또한 미국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국회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회의의 결과를 폭넓게 알리낼 수 있었다.

<여성네트워크> 활동가들은 1999년 5월,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회의와 그 해 9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지 정화를 위한 국제 현장단체 정상회의에 참가하여 미군사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 보장, 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정화와 올바른 전환을 촉구하였다.

2 탈군사주의 운동으로 확장

<여성네트워크>는 3회 국제여성회의를 통해 미국 군대로 인한 피해에서 군사주의로 인한 피해로 눈을 확장하게 되었다.

3회 국제여성회의는 2000년 6월 오키나와에서 개최되었다. 2000년 7월, C8 정상회담이 오키나와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미군사주의를 비판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안보 재정의’를 위한 국제여성회담(International Women’s summit to Redefine Security)’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3회 회의는 최종성명서를 통해 C8이 경제적 원칙으로 갖고 있는 ‘국가안보’ 개념을 비판하였고 경제적 원칙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군사주의와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지적하였다.

3회 회의에서 미해군 폭격훈련장으로 고통받는 비에케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푸에르토리코 여성이 참여하면서 네트워크의 범위가 확장되었고 내용적으로 군사화된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착취와 차별 등에 대해서 논의되었다. 이에 <여성네트워크>는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미국-푸에르토리코 여성네트워크 (East Asia-US-Puerto Rico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로 성장하게 된다.

4회 여성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기로 결정되면서 한국 참가단체들은 <SAFE>를 구성하였고 ‘군사주의와 여성인권’이라는 주제로 군사주의로 인한 피해와 문제점, 극복방안들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02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된 4차 국

제여성회의에서는 “나의 삶에서 우리의 평화를 : 군사주의와 여성인권”이라는 주제로 ① 군사주의와 여성, 탈군사화 ② 지구화와 군사주의: 9.11사태를 중심으로 ③ 기지촌에 유입된 외국여성들의 실태 등이 논의되었다.

4차 회의 후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맞서 여성들의 국제공동행동이 조직되었다. 2002년 10월 8일 미국의 아프간 침공 1년을 기억하며 이라크 공격을 반대하는 반전평화 국제행동은 국제 <여성네트워크>와 함께 각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조짐이 보이자, 2003년 1월 18일 광화문에서 반전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2004년 11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5차 국제여성회의로까지 이어졌다. 5차 국제여성회의는 ‘인간안보와 개발에 관한 여성회의’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다양한 현장방문과 그룹 토론이 이루어졌다.

3. 피해 현장에서 출발한 여성주의 운동

<여성네트워크>는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여성들/여성단체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쟁, 안보 등 군사영역과 관련한 국제적 활동은 ‘여성들’만으로 조직된 경우가 드물기에, 이 네트워크 존재 자체가 의의가 있다. 인종, 색수열리티, 민족, 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주변인들의 네트워크로 민주성, 자율성, 평등성의 관계를 지향하고, 상호소통의 구조와 운영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두 번째, <여성네트워크>의 활동 의의는 구체적인 현장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이다. <여성네트워크>는 그동안 전문가 중심, 남성중심의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군사안보 문제를 피해자들, 여성들의 목소리로 이야기하여왔다. <여성네트워크>는 군사력중심의 국가안보가 여성의 진정한 안보를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하여 ‘진정한 안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일상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제기하고 있다. 이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지역단체들이 현장 속에서 피해자들, 피해여성들과 함께 활동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세 번째, 안보문제를 여성의 경험에서 다시 읽고, 여성의 안전과 탈군사화를 위한 초국가적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의 의의가 있다. 국가주의를 기반으

로 한 군사안보를 비판하고, 국가안보에 선행하는 여성인권을 주요시하는 <여성네트워크>의 힘은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들이 일상적 삶에서 안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회와 군대 없는 세상을 꿈꾸는 상상력에 있다.



한국여성평화운동의 흐름과 쟁점

심 영 희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1. 서론

이 글은 한국여성평화운동의 흐름과 쟁점을 논의하고 이에 기반하여 한국의 여성평화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과제와 전망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가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평화운동이란 무엇인가?, 2) 한국사회에서 여성평화운동은 언제 어떻게 생겼나?, 3) 여성평화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나?, 4) 여성평화운동의 주요 쟁점들은 무엇인가?, 5) 여성평화운동의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은 무엇인가? 등이다.

2. 여성평화운동이란 무엇인가?

2.1 평화 및 평화운동의 개념

2.2 여성평화운동이란 무엇인가?

- 1) 광의의 평화와 협의의 평화에 따른 구분
- 2) 주체로서의 여성인가 관점으로서의 여성주의인가?

3. 여성평화운동의 발생 맥락

3.1 분단 및 안보 지상주의의 구조적, 직접적, 문화적 폭력에 대한 대응

3.2 평화운동의 장기적 부재

3.3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의 정체성 인식

4. 여성평화운동의 시기별 영역별 전개

그러면 우리사회에서 여성평화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나? 여기에서는 위에서 제시한대로 하버마스의 이론틀에 따라 각 영역별로 그리고 시기별로 여성평화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자. 하버마스의 틀에 따른 네 영역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 1) 통일/교류, 2) 반전/군축/국제, 3) 여성인권, 4) 평화교육/평화문화운동 등이다.

한편 시기구분은 1960-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이후의 네시기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1960-70년대는 군부독재가 등장하여 20여년간 군림해왔던 시기이자 돌진적 산업화가 추진되었던 시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1980년대는 제5공화국 시기로 군사정권이 계속되기는 하였지만 민주화 운동이 강렬하게 일어났던 시기라는 차이가 있고, 1990년대는 민주화가 진행되고 산업화의 결과 풍요한 사회가 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 이후에는 민주화와 풍요사회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화운동 영역 구분과 시대구분에 기반하여 한국의 여성평화운동의 주요 이슈와 특징이 어떻게 전개해 왔는지 살펴보면, 이 네 가지 여성평화운동 중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기생관광 추방운동, 여성노동자 운동과 같은 가족/사회영역의 여성인권운동과 원폭피해자지원활동, 발위비삭감운동과 같은 경제영역의 평화운동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다.

74년에 처음 나타난 원폭피해자 지원활동을 우리나라 여성평화운동의 시작으

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데, 이것은 좁은 의미의 평화운동 개념에서 본 경우이다. 그러나 기생관광추방운동, 여성노동자운동 등도 넓은 의미의 평화운동 개념에서 보면 평화운동에 포함할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이들은 당시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잘 보여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잇습부터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 4.1 여성인권 개선운동
- 4.2 반전 군축 국제연대 운동
- 4.3 남북한 화해협력, 통일운동
- 4.4 평화문화 평화교육 운동
- 4.5 변화추세 및 특징

<표 1> 시대별 영역별 여성평화운동의 전개

	배경 및 주요사건	통일/교류/법제 도개선운동	반전/군축/국제/법 제도개선운동	여성인권/법 제도개선운동	평화교육/평 화문화운동
1970 년대	베트남전쟁 파병 1972.79 유신독재 1972.74 남북공동선언		75 원폭피해자 지원 운동	기생관광 반 대운동	
1980 년대	1980 광주민주화운동 5공 독재 1988. 7.7선 언		89 핵발전소 반대운 동, 반전반핵운동 87 최루탄추방운동	1980년대 여 성노동자운동 (여·동일방직)	통일교육 시 작
1990 년대	1990.8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1992 1.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1991 걸프전 1994년 북 영변 핵위 기 1995 북한기아 1998 군가산점제 위헌 판결 1999 서해교전	1991-3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1997 북한임산모 와 어린이 식량 지원 활동 1998 탈북여성지 원운동	91년 걸프전 반대운 동 91년대 방위비삭감 운동, 군예산집행 감 시운동—무기 도입반 대운동 한반도 전쟁 위기와 평화정착활동	1990년 정신 대 태폭운동 기지촌여성운 동, 군가산점 제 폐지운동	평 화 동 일 교 육, 북한이해, 평화교육

2000 년대	2000. 6.15 남북공동선언	2002 남북여성통일행사	MD배치저지운동	2000년 여성 국제전법재판 기지촌여성운 동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 병영문화개선 운동	갈등해결운 동 일상의 평화 운동, 평화문화운 동 (3각제 3 팀이)
	2001. 9.11 테러		SOFA 개선운동		
	2001. 10.8. 미국 아프간 침공	2004 용천동기	효순 미션 캠페인		
	2002. 1. 부시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	2005 6.15대회	촛불시위		
	2002 여중생 미군 장 갑차 압살사건	8.15민족대축전, 남북여성통일대 회	평택미군기지 확대 저지운동		
	2003 이라크 전쟁 발 병	통일정책에 여성 참여확대 법제도 개선운동	APA SAFE GPPAC		
	2003 2차 북핵위기				

하버마스의 틀에 입각하여 통일/교류와 반전/군축운동은 “국가 국제영역의 활동”으로서 “체제차원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여성인권 및 평화교육/평화문화운동은 “일상영역의 활동”으로서 “생활세계 차원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양적으로 보면 국가 국제영역 등 “체제차원의 활동”이동이 공론영역이나 가족/사회영역 등 “일상영역의 활동”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여성평화운동이 넓은 의미의 평화운동을 표방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상 사실상 좁은 의미의 평화운동에 초점을 두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통일/교류, 반전/군축 등 “국가 국제영역의 활동”을 중심으로 보면 반전/군축운동은 70년대부터 활동이 나타나나 통일/교류운동은 90년대에 가서 되늦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즉 초기에는 군축운동이 주류를 이루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90년대 이후에 남북화해협력, 한반도 통일 관련 활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90년대 후반의 북한여성동기 운동이 2000년대 이후에는 남북여성교류, 통일축전등 직접적 남북여성교류로 바뀌었고, 90년대의 방위비삭감운동은 2000년대에 MD배치저지운동 SOFA 개정운동 등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운동으로 바뀌는 추세를 보여준다. 특히 통일/교류, 반전/군축운동은 국내외 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여성인권운동, 평화교육/평화문화운동 등 “일상영역의 활동”을 중심으로 보면 여성인권운동의 경우 초기에는 기생관광추방운동, 여성노동자운동, 지존여성운동 등이 나타났다가 후에 정신대대책활동, 군가산점제 폐지운동 등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평화교육, 평화문화운동의 경우 초기에는 원폭피해자 홍보활동, 반전반핵교육 등에 초점이 있었으나 후에 통일교육 쪽으로 이동하고 90년대 말 이후에는 다시 갈등해결증제훈련 활동, 평화심상훈련 활동 등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통일/평화교육운동의 통일운동에서 평화교육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여성평화운동은 세계평화 한반도평화라는 거시적 담론외에 일상의 평화라는 미시적 담론을 개발하려 노력하고 이 둘을 연결시키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운동의 초점이 후자보다 전자에 쏠리는 경향이 있고, 이 둘 사이가 잘 연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둘 사이에 충돌과 괴리가 발견된다. 그 외에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의 관계도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통일운동을 평화운동의 일부부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나 통일운동과 평화운동 사이에 충돌과 괴리가 발견되기도 한다.

5. 여성평화운동의 주요 쟁점

이처럼 네가지 영역을 통해본 여성평화운동에서는 몇 가지 주요 쟁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1) 통일운동과 평화운동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 2) 민족주의, 국가, 안보와 여성인권의 딜레마, 3) 여성평화운동의 정체성 문제, 4) 여성평화운동의 대중화 문제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5.1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의 관계

통일과 평화를 앞에서 말한 세 가지 폭력과 연관시켜서 그 의미를 본다면 통일은 구조적 폭력을 해결하려는 시도이고 평화는 구조적, 직접적, 문화적, 폭력을 해결하

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평화운동은 이처럼 통일과 평화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부적으로 갈등과 딜레마를 겪게 된다.

여가에서 여성평화운동단체는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여성평화운동이 목표로 하는 통일은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다. 즉 평화통일을 주장한다. 나아가 그 평화통일도 통일에 방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화에 방점을 둔다는 것이다. 북진통일, 흡수통일과 같은 일방적이고 체제중심적인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 남북이 적대적 대립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평화롭게 사는 것”이 통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통일보다 한반도평화체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십수 년 전부터 평화운동에 적극적인 것은 여성들이었고, 군축과 반전운동의 구호도 여성운동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였다. 또한 전체 활동을 평가해 볼 때, 여성평화통일운동의 주력군이라 할 수 있는 두 단체,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나 YWCA는 활동의 중심이 통일운동보다는 평화운동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여성의 접근이 일반 통일운동과는 다른 자기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현백, 2006) 여전대, 평화여성회에서 한반도평화통일을 다루는 부서의 이름은 “한반도평화센터”로서 통일이라는 이름은 아예 빠져 있다 (심영희, 2006). 또한 국가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보다 인간안보 여성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를 주장한다. 이것은 여성평화운동은 “적극적 평화”를 목적으로 보고, 전쟁 반대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화적, 직접적 폭력을 모두 고려하는 폭넓은 평화의 개념에서 보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도 또한 자신의 활동을 “민족통일운동으로서의 반전·반핵·평화운동, 민족자주화와 민족 생존구원운동으로서의 반전반핵평화운동의 입장을 명시하고 정체화하게 된다.¹²⁾ YWCA도 1986년부터 다른 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인류의 기본생존권을 위협하는 핵 반대 운동으로 전환함으로써 ‘반전·반핵·평화’운동을 표방하게 된다. 원폭피해자지원활동에서 반전반핵운동으로 이어갔던 것은 80년대 당시 치열하게 논쟁하며 확산되었던 이념의 세례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12) 이현숙은 “1974년에 시작한 원폭피해자지원운동이 1987년에 이르러 확고한 이념과 믿음에 기초한 반전반핵평화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1988년을 기점으로 점차 민족통일운동으로 말 변화했다고”고 평가한다. 344쪽.

이는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는데서 출발하여 피해자 인권의 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와 연결시킨, 인식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생적 평화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김엘리, 2005)

여성평화운동의 목표는 분명히 평화에 방점이 있지만 실제 활동을 보면 남북여성 교류 등 한반도 평화활동에 보다 많은 비중을 주어지고 있는 것 같다. 여성평화운동의 시기별 분야별 활동내용을 보면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된 국가 국제영역의 활동이 반전평화, 군사주의 평화문화 평화교육 등 일상적 평화 차원의 활동보다 훨씬 많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여성평화운동이 목표하는 달리 평화통일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에 많은 활동을 함해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는 왜 그러한가? 우선 한반도 평화운동에 의해 일상의 평화운동이 식민지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말로는 “적극적 평화”를 외치지만 실제 일을 할 때에는 아직도 “소극적 평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평화운동의 중요한 부분은 역시 전쟁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또한 일상의 평화 담론이 한반도 평화운동, 반전운동 등에 침투하지 못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심영희, 2004).

그러나 여성평화운동의 본래의 목적과 성격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적극적 평화”라는 개념에서 보아야 하고, 전쟁 반대 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화적, 직접적 폭력을 모두 고려하는 폭넓은 평화의 개념에서 보아야 한다. 즉 국가 국제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영역의 활동 또한 여성평화운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활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여성통일운동은 “적극적 평화”의 개념에서 보는 통일운동, 즉 통일과 평화주의 이상을 결합하는 운동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대로 한반도 평화통일과 일상적 평화차원 사이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것이 여성평화운동이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여성평화운동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안보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안보 패러다

임이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5.2 민족주의, 국가, 안보와 여성인권의 딜레마

한국사회처럼 안보지상주의가 제도화된 사회에서는 군사주의, 국가, 민족, 안보가 항상 우선순위에 있고 여성들은 2등시민으로서 각종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여성평화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라진다. 일부 여성평화통일운동가들은, 통일운동은 민족주의 운동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고 민족주의는 남성성을 고무하면서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우리 역사에서 보수적인 통일운동은 군사주의의 후원 아래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또 첨예한 권력 각축전이 벌어졌던 장이어서, 애초부터 여성은 여기에서 배제되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민족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여성이 이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현백, 2005).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여성은 어떤 형태로든 민족주의에 연루될 수 밖에 없으며, 민족주의와 결별하고 여성주의를 선택할 때 순수성은 간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여성대중에 대한 광범한 영향력은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민족주의와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반전군축운동이 분단해소를 위한 통일운동의 맥락에서 진행된다 보니 민족주의에 기반한 반미운동으로 또는 극단적 민족중심적인 운동으로 치환되는 경향이 있고, 이런 민족주의 운동은 남성적 국가주의와 결합하면서 반전운동을 남성주체들 간의 논쟁과 다툼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간의 국제적 연대를 차단시킬 우려가 있고, 개인을 국가와 동일시함으로써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일상적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침묵하게 만든다고 본다 (김엘라, 2005). 이런 입장에서는 국가를 주요 행위자로 간주하여 국가와 국가의 대결 속에서 전쟁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반전운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글로빈한 반전운동은 일상적 삶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리하게 포착하는 감수성에서 시작한다고 본다.

5.3 여성평화운동의 정체성 문제

다음으로 여성평화운동의 관점, 담론의 차원에서 보면 여성평화운동은 한편으로는 다른 시민사회운동과 연대하여 함께 나아가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여성평화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정화름만드는여성회, 2002). 그러나 여성평화운동의 정체성은 확립되지 성별분업적 평화운동은 지양해야 하는 과제도 가지고 있다.

많은 시민단체들은 평화운동의 과제는 여성에게 덜 잘 어울린다는 성별분업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는 한 대표적인 남성 진보 시민운동가의 말에 잘 드러난다. “성차별인지 모르겠지만 평화의 이미지가 여성에게 더 맞다고 봅니다. 어머니 누이가 오히려 아버지보다 낫지 않나요?...상징적 측면에서 여성과 여성단체가 평화운동을 하는 것이 남성과 남성단체보다 더 호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화름만드는여성회, 2002, p.64) 이는 어떻게 보면 칭찬받기도 하지만 분명 성별분업적 사고를 밑바탕에 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남성은 전사, 여성은 평화주의자라는 성별분업적 사고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여성평화단체에 성별분업을 은근하게 요구하기도 한다. 예컨대, 양심적 병역거부, 보안법, 한총련 합법화 문제 등 매우 민감하고 쟁쟁한 문제들의 경우에 여성평화단체에서 이를 제기해줄기를 요청하거나 기대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여성평화운동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여성주의 관점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조이여울, 2002). 여성평화운동을 뒷받침해줄 이론적 철학적 기반이 취약하고, 전문화된 연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또한 일상의 평화 담론이 한반도 평화운동, 반전운동 등에 침투하지 못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평화운동의 정체성은 확립하되 성별분업적 평화운동은 지양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여성주의적 평화운동으로 갈 때 과연 시민운동과의 연대가 가능할지 또는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고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5.4 여성평화운동의 대중화 문제

여성평화운동의 대중화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애는 여전히 대다수 여성들이 평화운동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 고민할 만한 현실적 연결통로를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학부모운동, 실업가장 문제,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이슈는 여성들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어 있지만, 왜 여성들이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을 해야 하는지,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단기적으로 해결될 전망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쾌한 대답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여성들이 도대체 “왜 현시점에서 여성운동의 많은 당면한 과제를 남겨두고 평화운동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이런 까닭에서이다. 바로 이런 지점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않는다면, 여성 통일운동은 대중운동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여성은 국가의 동원대상에 머물렀고, 통일운동 내에서 도 여성은 주변집단으로 머물렀다. 이런 현실을 넘어서 여성이 주제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성통일운동의 대중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1997년에 활발하였던 ‘북한동포돕기운동’ ‘금강산관광’ 그리고 ‘겨레 손잡기 대회’와 같은 행사들은 대중화의 중요한 지점으로 거론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런 행사들은 그저 대규모 행사의 집행에 급급하여, 왜 이런 행위들이 필요한지 혹은 통일운동에 대한 방향은 어떠한지 하는 것을 대중들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는 실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회성 행사에 여성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사전교육을 통해서 그 의미가 충분히 내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대중화의 지점과 관련하여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여성평화운동은 어느 정도는 여성에 대한 관용과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여성평화교육에서 시작해야 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실행방향을 정교하게 짜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통일·평화 교육의 성과를 더욱 본격화할 수 있는 곳은 학교교육이다. 과거 교육제도 내에서 이루어진 통일교육이 보수적인

반공교육에 치우쳤다면, 이제 학교교육을 통해 평화교육을 확산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해졌다. 따라서 여성평화운동은 다양한 제도적 차원을 통해 학교교육 내에 올바른 통일·평화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정현백, 2005)

6. 여성평화운동의 전망과 과제

이 글은 1) 여성평화운동이란 무엇인가?, 2) 여성평화운동, 언제 어떻게 생겼나?, 3) 여성평화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나?, 4) 여성평화운동의 주요 쟁점들은 무엇인가?, 5) 여성평화운동의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은 무엇인가? 등의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평화운동의 흐름을 논의했고 쟁점을 논의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한국의 여성평화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쟁점도 논의하였다.

이제 이런 쟁점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서는 필요한 과제로서 한편으로는 기존의 현실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다른 편으로는 여성들만의 담론을 형성해나가는 이중 전략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여성인권과 여성안보를 위한 개입의 중요성

첫째, 평화와 여성인권, 여성안보를 위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운동과 정책의 차원에서 여성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서 1) 여성의 참여를 확보하는 법적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고 2) 이 분야의 여성리더십을 위해 리더관점에 입각한 평화문화 및 교육이 필요하며, 3) 여성운동, 여성평화운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위의 모든 영역에서 리더관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여성주의적 여성평화운동의 중요성

둘째, 여성평화운동에서 여성주의적 관점과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반전/군축 운동과 통일/교류 운동에서 여성주의 관점을 형성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반전/군축운동에서는 군사주의, 가부장적 분열을 극복하고, 소수자 약자

를 배려하는 운동을 해야 하며, 개인의 차원에서는 폭력을 극복하고, 욕심 버리기 등의 운동 등 일상에서 평화만들기 운동을 해야 한다. 통일운동의 경우를 본다면 통일운동을 평화운동의 차원에서 전개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남북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도록 노력하며 이의 기반위에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통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이 둘 사이에 조화를 모색하려는 것이 그것이다.

여성주의적 여성평화운동은 비판적 사회운동의 한 예로서 체제위기와 새로운 정체성의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음을 예시한다. 평화와 여성인권, 여성안보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평화운동은 이중전략을 쓸 필요가 있다 (심영희, 1998b, 12장). 한편으로는 기존의 안보과정에 활발하게 끼어들기를 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여성주의적 비전더화된 안보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보다 여성주의적 담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이 변화의 주체로 나설 필요가 있다.



심영희, “한국여성평화운동의 흐름과 쟁점”
정경란, 고유경, “한국여성평화운동과 국제연대”

이 대 훈
(평화학 강사)

서론의 글을 읽고 여성평화운동의 역사와 경험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러한 실천에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 없고 간접적인 파악과 이해에 근거해서 논찬을 하게 되므로 매우 불충분하고 오류가 많은 논찬이라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이 논찬에서 논찬자가 피력한 여러 가지 의문은 논찬자의 부족한 이해에 기인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추가로 토론과 논쟁이 진행되면서 이해가 깊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심영희, “한국여성평화운동의 흐름과 쟁점”>

여성평화운동의 주요 흐름과 쟁점을 훌륭하게 요약 정리한 이 글은 우리 사회운동이 보통 소홀히 취급하는 역사를 때맞춰 기록하고 정리하는 매우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필자와 모든 연구자, 조사자들에 대해서 감사를 포함합니다.

이 글은 갈등의 구조적 문화적 폭력과 적극적 평화의 이해가 어떻게 여성에게 적용되는지 설명하면서 시작되며, 본문에서도 적극적 평화와 여성평화운동의 중요한 정체성 또는 내용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역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여성주의 입장의 평화운동을 염두에 둔다면, 여성주의 시각에서 폭력과 평화를 재규정하려는 노력, 적극적 평화론과 여성주의의 평화론을 비교하며 상호

비판을 시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성평화운동’을 기존에 주어진 이론에 의거한 탐구할 대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 평화와 관련된 기존의 관점을 뒤집거나 수정하는 성찰이 생산되는 실천으로 볼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며, 적극적인 평화론에 대한 비판이 왜 ‘생략’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 이 글은 하버마스의 논의를 빌려와 여성평화운동의 영역을 설정하고 있는데, 하버마스의 영역구분이 평화운동에 의미가 있는지도 논쟁거리이지만, 분석방법으로서 영역 설정은 각 영역 간의 상호작용과 교차/전복/판동/침투/거부 등 ‘영역간 관계’를 다루지 않으면 ‘설명을 위한 분석’이지 ‘변화를 위한 설명’이 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에서 여성평화운동의 개념과 영역이 첫째, 평화의 의미를 넓게 볼 것인가 좁게 볼 것인가에 따라, 둘째, ‘여성’의 의미를 주체로서의 여성으로 볼 것인가 관점으로서의 여성주의로 볼 것인가에 따라 그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의미 설정이 핵심적인 논쟁 지점인 듯 한데 이 논쟁이 충분히 전개되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여성평화운동의 각각의 실천에 대한 서술은 정점을 부각시키지 않는 서술방식이어서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각각의 실천 경험에서 제기된 쟁점을 세 부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특히 여성주의 내부, 여성운동 내부, 평화운동 내부의 쟁점을 드러내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합니다. 예를 들어 모성을 부각시키며 ‘어머니’ 담론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평화운동을 하나의 사례로 언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그로 인해 발생된 평화운동의 성별분업 논쟁과 다른 ‘남성적’ 평화운동간의 긴장과 충돌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논란이 다루어졌다면 많은 독자들이 글을 읽으면서 손에 땀을 쥐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북한여성과의 교류 협력에서 나타난 긴장과 충돌, 그 긴장이 민족단결, 민족협력 담론에 미치는 영향, 그러한 논란이 충분히 전개되지 않고 ‘운동 내부’적으로 억압되고 있는 이유도 지론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록은 많으나 분석과 성찰이 적은 점이 가장 아쉬운 것인데, 비판적 분석이 적기 때문에 결론적인 선언 “평화운동은 시기에 따라 잊슈를 달리하면서 발전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는 “네 가지 평화운동 영역 모두에서 주체가 여성기독교 단체에서 전문적인 단체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와 같은 ‘발전’의 설정이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고 봅니다. 글에서 이러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분석’은 오직 “여성단체들이 각기 분화된 영역에서 ‘전문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영역별 ‘전문성 획득’이 발전의 지표로 충분한지 의문입니다.

<표1>에 대한 분석으로 언급되는 “여성평화운동이 넓은 의미의 평화운동을 표방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상 사실상 좁은 의미의 평화운동에 초점을 두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통일운동에서 평화교육으로 이동”과 같은 지적들 역시 재가 소견에는 분석없는 서술입니다. 그 현실과 그 변화가 “어떻게” 구성된 것이며 왜 행동 주체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등의 질문에 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의 연결과 긴장 같은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도 저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으로써 분석을 피합니다: “그 외에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의 관계도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통일운동을 평화운동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 통일운동과 평화운동 사이에 충돌과 괴리가 발견되기도 한다.”

민감한 쟁점에 대한 분석과 성찰의 부족은 <5.1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의 관계>에서도 비슷한데, 양자가 어떤 관계를 취했는지 알 수 없고 각 단체가 통일과 평화를 선택하여 ‘비중’을 달리했다는 설명만 있습니다. 이러한 비중의 차이는 아래와 같이 설명되지만 이것이 여성평화운동의 ‘여성주의’ 그리고 통일운동의 ‘민족(통일)’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왜 그러한가? 우선 한반도 평화운동에 의해 일상의 평화운동이 식민지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탈로는 “적극적 평화”를 외치지만 실제 일을 할 때에는 아직도 “소극적 평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평화운동의 중요한 부분은 역시 전쟁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또한 일상의 평화 담론이 한반도 평화운동, 반전운동 등에 침투하지 못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2쪽)

<5.2 민족주의, 국가, 안보와 여성인권의 딜레마>는 이러한 분석을 추가로 하는 절로 보이지만 여기서 무엇이 딜레마인지 설명이 불분명합니다. 민족을 강조하는 쪽과 탈민족을 강조하는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딜레마라면 이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여성운동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주의와 민족주의가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 아닌가 합니다. 이 쟁점이 어떤 수준에서 어떤 세부적인 주제로 논쟁되고 있는지, 논쟁이 되고 있지 않다면 그 인간적인, 구조적인 요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서술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또 이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여성주의적 평화운동으로 갈 때 과연 시민운동과의 연대가 가능할지 또는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24쪽)라는 질문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여기서 ‘너무 여성주의적’라는 매우 논쟁적인 선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음으로서 필자는 독자들에게 논쟁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은 결론 부분의 ‘여성주의적 평화운동의 중요성’ 내용과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성평화운동에서 여성주의적 관점과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그 이전의 모둔 설명과 분석에서 도출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안보 개념의 문제가 있는데 이 글에서 ‘여성안보’라는 개념이 설명없이 결론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매우 많은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언어를 너무 쉽게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는 정치의 성별분업, 위험과 공포의 성별분업, 민족국가의 성별분업, 성별분업화된 민족국가의 형성과 유지, 가부장제의 사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언어이며 그러한 성별화된 열망을 현실화하는 언어행위인데, 어떤 사유체계로 ‘여성의 안보’ 또는 ‘여성적 안보’를 말할 수 있는지, 또 사회운동 내부에서 여성안보에 대한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 개념의 확정 이전에 심층적인 논의를 기대합니다.

<정경란, 고유경, “한국여성평화운동과 국제연대”>

이 글은 한국 여성평화운동의 다양한 국제적 경험을 매우 훌륭하게 요약하고 있는 중요한 기록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훌륭한 설명에서 합당한 응분의 분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국제연대’라고 하고 그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표지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교신하는 모든 행동을 국제연대로 설명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그 어떤 특별한 효과를 내는 것을 ‘연대’로 설명할지 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평화운동의 국제연대가 같은 특성이 있는지 여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막연한 국제연대론의 문제점은 우리 사회에서 ‘국제’가 갖는 신비감을 걷어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이 점이 생략된 상태로 결론에서 “여성평화 국제연대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는데, 성과와 성과 아닌 것의 구분을 쉽게 찾기 힘들니다. 즉, 글에서 “성과”는 (1)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인식 증대, (2) 국제연대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편다적 관점이 증대, (3) 국제연대를 위한 국내연대의 폭을 확대, (4) 국제연대의 방식이 다양화, (5) 정부, 유엔 등에 압력 행사, (6) 문화이해 다양성 증대로 요약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론은 (2) 항목에 포함된 ‘편다적 관점’을 제외하고는 기업간의 교류를 포함한 모든 국제교류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여성평화운동과 관련된 시사점을 찾기 힘들다고 보입니다.

그 이유를 짐작해 보면 막연하게 ‘국제연대’라는 관념을 설정하고 실천을 하면서, 그 실천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쟁점으로 드러난 부분을 ‘역사 설명’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당연히 제기되었을 많은 쟁점을 생략하고 ‘말끔한’ 역사설명 방식을 취할 때 결론은 매우 진부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심영희 선생님의 글에서 언급되는 ‘여성주의 시각의 평화운동’과 대비되어, 정경란·고유경 선생님의 글에서는 ‘여성주의’대신 ‘젠더적 관점’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제 모

□ 예 모

□ 예 모

평화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참여

평화여성회의 회원이 되시면

- 문화행사, 토론회, 연구활동, 캠페인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회비 납부로 평화여성회 활동을 후원합니다.
- 소식지와 자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형편에 따라 자원활동 및 다양한 회원모임에 참여합니다.

○ 회원가입서 ○

기본사항	이름 (단체) 주민등록번호	성명 남 ☐ 여 ☐ 이동전화
연락처(집)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연락처(직장)	주소 직장명 전화번호	우편물받음곳 자택 ☐ 직장 ☐
회비구분	일반회원 월5천원 ☐ 월1만원 ☐ 월2만원 ☐ 월3만원 ☐ 기타 ☐ 학생회원(초중고생) 월3천원 ☐ 연2만원 ☐ 연3만원 ☐ 기타 ☐	
회비납부방식	CMS자동이체	
CMS신청서	거래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가입동기		
관심분야	경제대응 ☐ 통일과제 ☐ 국방과제 ☐ 평화교육문화 ☐ 갈등해결 ☐ 평화 실질 ☐ 소식지발행 ☐ 스타디오임 ☐ 평화축제 ☐ 기타 ☐	
가입일	200 년 월 일	

